

김용직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국정치의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 6공화국의 공론정치와 담론 분석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서명구

한국정치의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6공화국의 공론정치와 담론 분석

김용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서명구

인 준 서

서명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민주주의는 동의에 의한 지배이다. 공론장이란 여러 담론들이 경쟁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으로서, 바로 이러한 동의를 창출하는 과정이요, 동의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6공화국에서 한국정치는 처음으로 공론장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불완전한 측면이 적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공론정치, 여론정치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의 이행기인 6공화국의 공론장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민주화가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갖게 되었는가를 규명할 수 있다.

공론장은 지배담론과 도전담론의 대립구도로 되어 있다. 6공화국에서는 이러한 구도하에 민주화 담론, 성장-분배 담론, 통일담론이라는 내용이 지배세력과 도전세력에 의해 선점되거나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다양한 담론이 펼쳐졌다. 6공화국의 담론투쟁은 3당 합당을 전후하여 기본구도와 양상이 크게 바뀐다. 3당 합당 이전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체제안정형> 담론구도가 형성되었다가, 이것이 3당 합당 이후에는 <체제충돌형> 담론구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6공화국 말기에는 이러한 구도마저 소멸하여 담론장은 <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6공화국 담론투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3당 합당 이전 시기에는 체제안정형, 3당 합당 이후에는 체제충돌형 구도를 특징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담론은 계급보다는 이념 및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셋째 공론장은 항상 자체의

합리성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으며, 정부 및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넷째, 민중적 압력도 강력한 외부의 영향이다. 다섯째 현실성을 뛰어넘는 개혁담론은 성장의 기반을 잠식하여 오히려 개혁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여섯째 6공화국 담론의 일관적 특징 중 하나는 반재벌 성향이다. 6공화국 공론장에서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이후 민주화 이후 한국 공론장의 특징이 되었으며, 한국 민주화의 한계와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목 차

논문개요

1.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 목적 및 방향	3
3. 기존 문헌 검토	4
II. 방법론	16
1. 주요 개념 규정	16
2. 분석 모델 설정	25
3. 대상과 범위	27
III. 한국정치에서의 민주화와 공론장의 구도	31
1. 공론장의 환경 및 담론의 이념적 분류	31
2. 역대 정권하의 공론정치와 공론장의 기본구도 및 특징	34
3. 민주화 이후 공론정치와 공론장의 기본 특징	37

IV. 3당 합당 이전의 공론정치와 담론구도	40
1. 정치사회적 환경	40
2. 보수 담론	41
3. 급진담론	46
4. 자유주의 담론	54
5. 공론정치와 공론장의 구도	62
V. 3당 합당 이후의 공론정치와 담론구도	71
1. 정치사회적 환경	71
2. 보수 담론	71
3. 급진 담론	78
4. 자유주의 담론	85
5. 공론정치와 담론의 구도	90
6. 이후의 문제들	97
VI. 결론	99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1. 서론

1. 문제제기

6. 29와 6공화국의 노태우정부가(이하 6공화국)¹⁾ 민주화의 일대 전환점이었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공화국에서의 민주발전을 평가하는 데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지만, 이후 문민정부가 출범하였고 이어서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 등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진전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군부 권위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과연 한국정치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아직도 <複數의 수평적 정권교체(two turnover test)>(Whitehead, 26쪽)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문화에 있어서도 <시민형(civic) 문화> 혹은 관용과 공존의 상생의 정치가 확고히 착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 언론탄압 논란 역시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포퓰리즘>적 요소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 역시 민주주의가 건설하게 뿌리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치를 볼 때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

1) 한국정치에서는 통상적으로 헌법체제에 따라 공화국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6.29 직후인 1987년 10월 채택·공포된 헌법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헌법체제 면에서는 현재의 <참여정부>까지 모두를 6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스스로를 차별화 했지만, 노 대통령 정부는 스스로를 <6공화국>이라고 자칭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태우 정부를 그대로 <6공화국>이라 칭하기로 한다.

가 아니다. IMF 관리체제를 경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한 핵, 한미동맹 관리 등 국가의 사활이 걸린 안보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민주화가 국가발전과 병행을 이루거나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민주화가 갖고 있는 제반 특성, 특히 이러한 제약적이고 부정적 측면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그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민주화의 이행기인 6공화국의 공론정치와 담론의 성격과 특징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동의의 창출과정이다. 이러한 동의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적 선거 등 여타 제도와 더불어 불가결의 것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정치영역 또는 공론장의 존재이다. 근대 공론정치는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는 국가부문의 의회정치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의 정치영역이다(김용직^a, 4쪽).

한국의 경우 그동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의회정치는 제도적으로도 운영면에서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시민사회의 정치영역 즉 공론장 역시 지배세력의 강력한 영향권 하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치권과 운동권이라는 양대 세력의 동학 속에서 민주전환은 신속히 이룩되었고²⁾, 언론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된 가운데, 한겨레신문의 등장으로 급진이념의 매체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공론정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1987년 10월의 개헌과 대통령선거법 개정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된 데 이어, 1988년 3월 8일 소선거구제가 통과됨으로써 선거에 의해 대통령과 의석분포가 확정되는 제도로 복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구 의석의 배분은 제1당에게 절반을 할당하게 되어 있어 의석수의 왜곡 부분은 완전히 시정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공론정치와 공론장이 민주정치에 부합되고 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다. 오히려 오늘날 한국정치의 파행과 문제점의 많은 부분이 6공화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혹은 6공화국의 패턴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민주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6공화국에서 공론정치, 특히 공론장이 어떠한 양상으로 움직였는지 그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화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방향

본 논문은 6공화국의 공론장이 어떤 이념의 담지자들에 의해 움직였는지, 공론장이 주요한 사회 세력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추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담론들은 주요 이슈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즉 어떤 내용, 콘텐츠를 가졌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담론 상호간에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실정치, 의회정치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각 세력이 모두 공론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게임의 법칙으로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지배세력이 <힘에 의한 지배> 혹은 <정치공학>으로 회귀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저항세력은 <대중동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폭력노선, 이른바 <기동전>을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공론장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제1장에서 먼저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6공화국의 담론투쟁을 직접 다룬 문헌 및 한국 민주화 과정 속에서 공론장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다룬 문헌을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동서양에서 나타난 공론의 개념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론 및 공론장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배담론과 도전담론의 대립구도로서 4가지 이념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본격적인 담론 분석에 앞서 한국정치 전체에서 나타난 민주화와 공론장의 관계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역대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이후의 공론장의 특징을 이념형의 분류에 따라 개괄해 보았다.

4장과 5장에서는 3당 합당 합당 이전과 3당 합당 이후로 나누어 6공화국의 공론정치와 담론구도를 직접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보수담론과 급진담론 그리고 자유주의 담론이 각각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본 후, 이들이 공론정치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부침을 하였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는 각각 어떠한 이념형에 속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6공화국 공론장이 보여준 특징을 정리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3. 기존 문헌 검토

이러한 방향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애로점은 6공화국의 공론정치와 공

론장을 직접 대상으로 다룬 문헌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와 공론장 전체를 다룬 문헌들을 검토하되, 여기서 6공화국에 공론장의 특성을 어떻게 보았는지 추출하거나 경우에 따라 유추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 담론투쟁을 직접 다룬 문헌

김도중은 담론의 개념을 도입하여 현대 한국정치 구조의 한 측면을 분석하였다. 그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종속화 효과를 기준으로, 먼저 사회구성원이 지배담론을 수용하는 <동일화> 현상이 초래되면, 종속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반대로 사회 구성원이 지배담론에 대해 전도적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았다. 첫째 <반동일화>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역담론> 혹은 <저항담론>으로 지칭한다. 이는 지배담론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벌어지는 저항적 논의를 말한다, 둘째는 <비동일화>일 경우로서 이를 <대항담론>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지배담론에 맞설 수 있는 대립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데올로기적 종속의 지배적인 형식에 대항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다(김도중, 134-135쪽).

그는 한국정치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지배담론이 존재하고 저항담론은 존재했지만, 대항담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60년대 초에는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에 따른 근대화 담론이 대두, 일방적으로 종속을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와 경제적 분배와 정치적 자유를 내세우는 저항담론이 대두되었고, 80년대 초 국가의 폭압성에 대한 반발로 급격히 형성된 사회주의적 변혁론이 대항담론으로 대두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 사회의

민주화와 공산권의 몰락으로 이러한 변혁론적 대항담론은 소멸된 가운데, 국가주도의 개혁담론이 지배담론으로서 힘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사회는 미시담론에 몰두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일담론을 펼쳤다는 것이다(김도중, 135-137쪽).

그는 박정희 시대 이후에도 5공화국과 6공화국은 물론 그 이후 양김의 통치 기간에도 박정희 패러다임이 지속된다고 보았다. 담론의 주제는 변화를 보였지만, 주체 또는 주도세력의 태도나 가치체계가 새로운 담론의 주제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등 권력구조와 지역성에 기반하는 정당구조는 변함없고, 87년 대선에서 양김통합의 실패, 호남배제, 그리고 이후의 영남배제 전략등도 모두 박 패러다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도중, 143-145쪽).

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공공재의 형성에 비유하였다. 새 것 창출의 비용을 지불하기 보다는 기득권 수호의 무임승차의 논리에 편승하여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외집단에 대한 개혁에는 환호하면서도 내집단이 개혁의 대상이 될 때는 집단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세력이 박정희에 대한 저항담론에 머물고 있는 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김도중, 147-148쪽).

이러한 김도중의 연구는 통시적 차원에서 하버마스적 공론장 유형에 입각하여 한국의 담론구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뒷받침된 경험적 연구는 아니라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또한 6공화국 이후의 새로운 담론, 특히 국제화-세계화 담론의 가능성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사회의 담론투쟁의 내용과 흐름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것은 조희연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다층적인 계급적, 사회적 투쟁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계급투쟁적 시각을 취하면서,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투쟁과정이 담론투쟁과 병행된다고 보았다(조희연, 33-35쪽)

그에 의하면 담론의 공시적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지배블록과 저항블록간의 현실정치 사회적 투쟁은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투쟁을 낳지만, 반대로 담론투쟁은 현실정치 투쟁의 구성 및 전선을 변화시킨다. 둘째는 담론의 토대적 규정성으로서, 담론적 투쟁과정은 거시구조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 혹은 경제적 토대의 변화에 의해서 규정된다(조희연, 35-38쪽).

이러한 담론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특정 시기 지배적 담론은 일정한 변수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된다. 경제적, 정치적 조건이 변화하면 지배담론의 효과도 변화하고, 저항담론은 확산되고 헤게모니화 하는 것이다. 둘째로 담론은 현실에서 전개되는 각종 사건 및 행위들을 해석하는 해석적 틀 혹은 인지적 틀을 제공하는데 특히 <금단과 배제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담론은 근본주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담론의 변화는 다차원적으로 진행된다. 가장 크게는 사회구성체적 수준, 다음으로 국가형태적 수준, 정권적 수준, 정책수준, 가장 좁게는 일상적 수준에서 나타난다고 한다(조희연, 38-43쪽).

한편 담론은 주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로 나타난다(조희연, 44-47쪽). 또한 담론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보인다. 지배담론은 50년대는 반공주의, 60년대 이후에

는 근대화 혹은 개발주의의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저항담론은 주로 민주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87년 6월 이후 수동혁명이 진행되면서 지배세력은 민주화를 자신의 담론으로 수용하는 한편, 반공담론은 통일담론으로, 개발 혹은 성장담론은 세계화 담론으로 전환시켰다. 반면 저항세력은 민주화의 허구성을 공격하고 또한 생활세계에 관한 급진적 담론을 제기하였다(조희연, 50-99쪽).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으로서 조희연은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종속성 문제를 거론한 점을 들 수 있다. 친미적 성격의 반공주의의 대미 종속성도 그렇지만, 국제화.세계화 담론 역시 미국모델의 일방적 성격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항담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조희연, 112-113쪽).

이상과 같은 조희연의 연구는 담론의 주체, 이념적 분포, 주요 내용 등에 관해 정치한 분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역시 문헌연구, 혹은 정치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계급론적 시각을 토대로 그람시의 헤게모니 유형에 따른 다른 분석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박정희 시대라는 특정시기의 담론에 대해서는 전재호의 연구가 있다. 그는 특히 민족주의라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어떤 담론구도의 틀을 토대로 위로부터 국민들에게 수용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는 민족주의의 담론을 핵심으로 여기에 시대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아갔다는 점을 규명하였고, 담론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서 미국의 대한정책과 북한의 대남정책이라는 외부요인과 함께, 대항세력의 저항이라는 내부요인을 지적하였다(전재호, 89-107쪽).

그의 연구는 한 시대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특정 시기의 <지배담론>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 민주화 과정 속에서 공론장의 특징을 다룬 문헌

먼저 6공화국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유보된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유보된 이유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두 가지 시각으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와 지배세력의 책임이 크다는 시각이다. 즉 정부와 지배연합이 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과소 민주화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운동권, 혹은 진보혁신세력, 노동부문 등으로 불리우는 도전세력연합의 책임이 크다는 시각이다. 이는 <과잉 민주화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6공화국의 민주화가 부족했다는 시각(과소민주화론)을 대표하는 논자로서는 최장집을 들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 보수적 경로로 인하여 한국의 민주화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의 과소 민주화론 중 공론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최장집, 115-122쪽). 첫째, 과대성장국가를 지탱해준 냉전반공주의가 공론장에서 민주화 이전에는 물론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둘째 80년과 87년의 <2단계 민주화>로 인해서 광주 등 지역균열이 개입되었고, 공론장에서는 지역담론이 대두되었다. 셋째 제도권 야당과 운동의 분열로 인해 공론장에서는 특히 도전담론이 약화되었다(최장집, 292-310쪽). 이러한 분열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87년

6월 이후 운동세력의 분화가 일어났고 특히 사회주의 몰락 이후 시민운동이 대두되면서 양자간 협력보다는 결별을 보임으로써 공론장이 분열된 것이 민주화의 제약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정태석 등, 280-291쪽).

한편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 공론장이 왜곡되고 <무력한 국가>가 출현한 것이 과소 민주화의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시민사회는 민주화 이후 국가와의 갈등보다는 오히려 내부 갈등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즉 권력을 상실한 구 보수세력들이 오히려 시민사회에 진출하여 시민사회를 내부적으로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즉 공론장이 왜곡,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분리된 영역으로서 자율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렇게 사익 추구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라는 보다 높은 단위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즉 사회가 정치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최장집, 125-129쪽).

최장집의 연구는 하버마스 보다는 그람식적 헤게모니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 공론장의 특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서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론장의 보수성이 강화된 점 그리고 제도적 야당과 재야세력간의 분열로 도전담론이 약화된 점을 지적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민주화 이후 공론장의 보수화는 하버마스의 <재봉건화>의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봉건화의 구체적 극복방안으로서 국가가 공론장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하버마스의 처방과는 반대라고 하겠다.

김호기, 김영범은 과소민주화의 원인으로서는 6공화국 출범 과정의 두

차례 선거에서 집권세력이 구사한 <두 국민전략>을 지적하였다. 즉 지배세력은 과거와 같이 힘에 의한 집권전략이 아니라 공론장에서의 헤게모니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1987년의 위기는 1980년의 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의 동의없이 물리력에 의존하는 <헤게모니 없는 독재>에 의해서는 극복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집권세력으로서의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급진적 프로젝트, 즉 헤게모니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김호기.김영범, 214-216쪽).

이들은 집권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제도적 절차- 헌법과 대통령선거법- 의 조작을 시도하였으며, 김대중의 사면, 복권을 통한 야당후보의 복수화를 시도함으로써 지역감정을 증폭시키는 한편, 민주-반민주의 대결구도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김호기.김영범, 217-218쪽). 또한 87년 7-8월 노동자 파업시기에는, “이들이 자본주의적 질서의 근본 변화를 추구하며, 이러한 대투쟁은 안정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대통령선거기간 중에는 <안정된 민주주의 대 불안정한 민주주의>의 대결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지역적, 계층적으로 양분하는 상징 조직을 기도하였다는 것이다(김호기.김영범, 218-227쪽). 이러한 관점에서는 집권세력이 <두 국민전략>으로 공론장을 침투.분열시켰고, 그 결과 <과소 민주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상당 부분 실증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공론장의 양상이라기 보다는 단기간의 선거전략 분석에 가깝고, 또한 지배담론의 공론장 침투 효과만을 다루었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6공화국의 <과소 민주화>의 요인으로서 <노동의 배제>를 지적하는

김병국, 임현진의 주장도 공론장의 왜곡 현상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정치는 <부분>, 즉 <과당성>을 인정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역동적인 힘이 발휘되는 정치인데, 우리의 전통 속에서는 균열구조로서의 노동은 배제되고, 특히 노동에 기반을 둔 혁신정당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김병국, 339-347쪽). 그 결과 6공화국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공론장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귀한 시간만 낭비하였다는 것이다(김병국, 임현진, 367-373쪽).

위의 연구는 노동을 배제한 결과, 노동과 자본(혹은 국가)이 공론장에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고 지적한 것은 6공화국의 문제점의 일면을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의 배제는 6공화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왜 6공화국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노동과 자본이 그렇게 심하게 충돌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밖에도 <과소 민주화>의 요인으로서 노태우 정권의 리더십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진덕규와 김충남, 그리고 한배호 등은 노태우대통령의 <소극적 리더십>의 문제점과 함께 측근 참모들의 자질 부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안청시, 진덕규편, 406-413쪽, 465-475쪽 및 한배호 463-466쪽). 이들의 의하면 총체적으로 6공화국은 <무정책의 정책>을 특징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6공화국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는 달리 공론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공론장의 흐름을 주시하며 이에 편승하는 전략을 취하였다고 보는 시각이다. 즉 6공화국 지배층의 소극성이 오히려 공론장의 정착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소극적 리더십의 파라독스>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6

공화국 민주화의 성격과 공론장의 일면을 정확히 지적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한 박자 늦은 대응으로 정책적 실기를 하였고, 그래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은 외면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북방정책에서는 오히려 너무 적극적이었던 점이 문제라는 점에서 소극적 대응을 총체적인 성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과잉 민주화론>은 6공화국에서 반대세력, 혹은 도전세력들의 과도하고 과격한 투쟁이 오히려 참다운 민주화를 저해하였다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민주화가 과도하게 추진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건전한 민주화의 정착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안청시는 <과잉 민주화>의 입장을 취한 경우이다. 그는 6공화국의 민주화가 지지부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R. Dahl의 inclusiveness와 public contestation의 문제를 원용한 <민주화의 경로>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대중의 정치참여가 광범하게 확대되기 이전에 엘리트들이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전통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안정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쉽다. 반면에 엘리트간에 경쟁과 타협의 정치가 확립되기 이전에 대중의 정치참여가 갑자기 허용되는 경우에는 민주화과정이 보다 <복잡한 경로를 거치며, 더딘 시간을 소모하거나>, <위험한 국면>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안청시, 17쪽). 이러한 시각은 대중의 과잉 참여가 공론장의 소화불량을 초래했다는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정치가 민주화 전환에는 성공하였으나, 민주주의의 정착 혹은 공고화에서 왜 그렇게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역시 공론장의 구체적이고 실증적 연구라기 보다는 경험적 관찰을 이론적 틀에 맞춘 설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백종국은 지배세력의 분열, 공론장에서의 지배담론의 분열이 발전국가를 약화시켰다고 보았다. 특히 지배세력이 지역담론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지지기반을 약화시켰으며, 또한 분배담론을 받아들인 결과 스스로 지배세력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백종국, 349-391쪽). 한편 임혁백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재벌과 기존 지배집단의 분열현상을 지적하였다(임혁백, 334-360쪽)

위의 연구는 6공화국에서 지배세력의 분열, 공론장에서의 지배담론의 분열된 사실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연구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역시 담론 혹은 공론장 자체의 분열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양상을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참고 이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발전국가론 역시 시민사회의 공론장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김일영에 의하면 발전국가는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화로 인해 사회가 강해지면서 <약한 국가-강한 사회>의 조합이 발생하였다고 것이다. 즉 시민사회, 공론장이 강해지면서 국가부문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론적으로 <강한 국가-강한 사회>의 조합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민주주의와 발전국가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김일영, 89-122쪽).

김일영의 연구 역시 실증적 연구는 아니며, 공론장 자체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이론적 고찰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는 직접적 관계가 약하다고 하겠다.

II. 방법론

1. 주요 개념 규정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공론의 개념이 존재해 왔다. 先秦시대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명분으로서 天命論과 民心論이 존재했고, 이를 토대로 朱子는 공론의 개념을 정립한 바 있다. 그는 <順天理 合人心 天下之所同是者>라고 하여, 공론이란 백성의 마음 가운데서 보편적인 天理를 추출해 냄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공론이란 論 즉 공개적이고 비판적 논의를 통해서 公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첫째는 공개성이다. 이를 통해서 중지를 모으고 담합이나 모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大臣과 諫官 뿐 아니라 특히 士들이 주축이 된다. 셋째 만장일치가 가능하다. 즉 모든 백성이 흔쾌히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결정의 책임소재가 가능해 진다(이상익, 강정인, 84-93쪽).

그러나 동북아의 전통국가들은 군주정으로서, 관이 결정을 내리는 권위주의 체제였다. 소수의 엘리트가 결정을 내리고 구성원은 무조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규범이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수평적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공론의 전통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조선조에서 강했다고 한다.

먼저 중국에서는 官 내부의 언관의 역할이 일찍이 사라졌다고 한다. 공론이라는 용어는 종족이나 촌락 등 기층사회에서 합의에 의해 규약을 작성할 때 주로 사용되었고, 사원이나 學塾을 중심으로 왕과 관

을 비판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는 고래부터 왕권이 약해 상급 귀족들의 회의에서 주요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 경우 논점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보다는 이해관계와 감정을 조정하는談습이 주로 행해졌을 뿐 공론의 기능은 상당히 약했다고 한다. 지식인들의 공론에서도 비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중첩적으로 분할된 봉건제도하에서 지식인들의 수평적 결합에 기여한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된다. 이에 비해서 조선조의 경우에는 국가체제의 한 가운데 공론이 제도화되어 존속해 왔다(三谷博, 8-16쪽).

조선조는 유교이념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하여 그에 의해 조직된 국가였으며, 따라서 유학자 집단은 단순한 왕의 수족이 아니라 이념의 수호자로서, 유교적 민본주의 즉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위치가 주어진 존재였다. 따라서 유교적 관료들은 왕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제도화 되었다(김용직a, 2-3쪽). 특히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의 이른바 3司의 언관제도가 대표적인 예였다.

한편 관료로 등장하지 않은 재야 유학자들, 즉 사림을 공론의 주체로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 내부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갔으며, 지방 관료들과 협의하여 충고를 하는 사회적 지도층이었다. 이러한 사림사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구의 시민사회와 비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향약, 향청, 서원을 통해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상소라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확보하였다. 셋째 선비의 문화를 통해서 일종의 시민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넷째 국가 밖에서 행해지는 유림의 합리적 공적 토론 즉 공론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적 시민사회는 또한 한계를 갖는 것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평민 또는 민중을 배제했다는 점, 또한 가족, 가문, 학파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결여했으며, 따라서 민주적 시민사회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임혁백, 307-309쪽). 특히 농민과 상인 그리고 수공업자들 사이에 근대적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시작한 19세기에는 오히려 노론 일색의 세도정치가 들어섬으로써 공론구조는 더욱 폐쇄적으로 변질하였다고 한다(김용직a, 3쪽).

서양에서 공론영역은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서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즉 사적 영역은 가족의 문제이고, 여기는 여성과 노예를 통해 개체와 종족의 생존과 유지라는 필연성과 연관된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서, 가부장의 지배-피지배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반해, 공공영역은 <행위>라고 하는 자유인의 활동적 삶(vita activa), 즉 도시국가(폴리스)의 기능이 펼쳐지는 곳이다. 이 경우 사적인 이해에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 즉 중간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에서는 바로 그 중간지대, 즉 사회적 영역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원래 사적 영역 즉 가족에서부터 분화되어 나왔다. 사적 영역은 본래 <소유의 세계>이다. 이곳은 여성과 노예의 소유를 통해 생명이 탄생, 유지, 소멸하는 신성한 장소이며, 여기서 한 가장, 하나의 자유인이 출현하는 곳이다. 사적 소유는 공공영역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자 공공 영역내의 숨겨진 은밀한 영역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노동이라는 삶의 과정이 공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원래 사적 영역에 속했던 소유의 세계가 근대세계에서 사적 영역을 이탈하여 중간지대 즉 사회적 영역화 하였으며, 여기서는 <사적인 이해에 공적이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중간지대, 즉 <사회적 영역>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론영역 혹은 공론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한나 아렌트, 55-132쪽).

이러한 공론장은 역사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른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18세기 공공 토론장, 클럽, 카페, 각종 신문, 잡지들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시민사회를 자유롭게 하며, 국가권력을 공중이 간섭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제한하려는 공공체의 이익 즉 일반이익에 입각해 있었다고 한다(하버마스, 177-196쪽).

그러나 이러한 공론 영역이 단순한 권력비판에 머물지 않고 일반의견(general opinion) 즉 입법기관으로 고양되어 하나의 새로운 <지배 원리>가 되는 데는 적지 않은 난점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루소(J.J.Rousseau)는 합리성보다는 의지(volonté)를 강조, 일반의견론을 전개함으로써 오히려 공론영역을 부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일반의견에 대한 합리화는 벤담(Jeremy Bentham)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논리로 나타났다. 가장 큰 논란은 부르주아계급의 과당성이 어떻게 국가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였다. 칸트(Immanuel Kant)는 부르주아지의 진보 개념을 받아들여 <합법성의 증진>이라는 역사철학적 차원에서 이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헤겔(G.W.F Hegel)은 부르주아 사회의 욕구체계의 무정부성, 공론장의 폭발성을 크게 우려, 오히려 지배의 원리를 국가, 민족정신에서 찾았

다. 한편 마르크스(Karl Marx)는 부르주아지의 특수이해를 적시, 공론장의 허구성을 비판하였고, 비 부르주아지가 공론장에 진입하여 공론장 자체가 과당적으로 파편화한 데 주목하였다.

이후 많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분열된 여론>이 공론장에 진입하여 <다수의 이름>이라는 명분하에 <지배적 견해>로서 강제권을 행사하는 데 주목,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이를 <여론의 멍에> 또는 <여론이라는 도덕적 강제수단>이라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공론장 권력>을 견제할 방법을 찾으려 부심하였다. 그는 특수한 이익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전화된 견해는 환원 불가능한 핵심적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독단적 잔류물은 <억제는 될 수는 있지만 이성의 공통분모로 환원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공론장에서 경쟁하는 이해관계들은 종교분쟁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비판>이 아니라 <관용>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다수파에 대한 소수파의 <제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즉 <공중의 자결>이 아니라, 특별히 교육된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에 의해 형성된 견해에 입각하여 정치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명된 사람들이 그들의 성격과 재능에 의해 판단토록 하는 <대의적 등급화된 공론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秘敎的 공중>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과시적 공공성>의 계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하버마스, 230-238쪽).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역시 여론은 <비판의 힘>이 아니라 <순응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즉 이제 여론은 권력

제한에 이용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효과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힘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과거의 <중간권력>이 소멸된 것을 한탄하면서 새로운 중간권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시민적 인권의 자유>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신분적 자유>에 기초한 <저항권>을 토대로 교양과 힘을 갖춘 시민들이 엘리트 공중을 이루어야 하며, 합리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여론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크빌은 <점증하는 관료제 국가의 전체주의> 성향도 여론과 함께 공론장을 파괴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기도 하였다(하버마스, 239-244쪽).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공론장을 가능케 했던 전제로서의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19세기 후반 프롤레타리아트의 신장과 보통선거권의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의 사회복지기능 확대 등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이 상호 침투함으로써 <국가의 사회화> 그리고 <사회의 국가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사적 영역에 속했던 노동·조직의 세계는 이제 공적 영역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사적 영역에 잔존한 가족과 여가로서의 <문예적 공론장> 역시 소비 메카니즘 속에 흡수되었다. 결국 사적 영역으로서의 공론장은 쇠퇴하고, 그 자리에는 재정치화된 사회영역, 즉 조직화된 사적 이익단체, 즉 政黨이 출현하여 공론장의 머리 너머로 공권력 기관과 직접 관계를 맺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치적 지배의 합리화를 하는 공론장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하버마스, 245-292쪽).

하버마스는 이렇게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 증대로 은폐된 계급이익이 노출되는 <정당성의 위기>와 사적 영역의 위축에 따른 동기 상실로 인한 <동기화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기술관료,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또한 정치적으로 조직된 계급투쟁, 즉 혁명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론장의 재봉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체계(system)에 식민화되어 있는 생활세계를 재정지화 해야 한다. 즉 생활세계에 내재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실현되는 정치적 공론장을 유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 등 제도적 절차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행위자들의 개인적인 지평을 떠나서 연대성을 획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법의 절차적 민주주의 요소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박상섭, 158-160쪽).

그런 점에서 공론장이란 시민사회의 등장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서, 토론이나 커뮤니케이션 등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 혹은 그러한 정보와 견해를 소통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하버마스a, 360쪽). 공론영역이란 사회에 관한 보편적 이해가 논의되고 그 갈등이 기존의 도그마나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적 논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론장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되살려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는 달리 혁명의 관점에서 이러한 공론 영역 혹은 공론장 현상에 주목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그람시(Antonio Gramsci)이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보상과 처벌 등 외부적인 물리적 힘을 통한 지배와, 지적, 도덕적 지배인 헤게모니로 구성된다(사쑤, 12쪽). 시민사회의 기구를 통해 작동하는 바로 이 헤게모니가 본 논문에서 말하는 공론장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헤게모니 개념은 사회주의 혁명전략이라는 실천적 개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서구 상황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즉 서구 선진국들의 <수동혁명>으로 인해, 이제는 러시아 혁명과 같이 단 한번의 극적인 순간에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해 준비하며 대기하는 <기동전>은 불가능해진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헤게모니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론장에서의 투쟁을 통해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하면 민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기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며 또한 그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태어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사쑤, 64-79쪽).

때문에 헤게모니 개념은 단순한 legitimation, indoctrination, false consciousness 라고 하는 이념과 문화투쟁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토대>, 즉 사회구성을 유지하는 역사적 블록의 성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쑤, 142-144쪽). 즉 헤게모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 도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안정된 부르주아 사회에서 특히 부르주아 계급의 지도력을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단순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전략을 넘어서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

요한 측면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토대>를 넘어서는 것, 즉 독자적인 영역으로 사고했으며, 그리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구분한 점, 또한 동의 창출로서의 헤게모니 개념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그의 헤게모니 개념은 자본주의 정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사쑤, 151-156쪽). 첫째, 헤게모니는 한 계급 뿐 아니라 계급의 일부를 대표하는 정치사회세력에 의해서도 획득이 가능하다. 둘째, 특정 역사적 상황은 정치세력들이 투쟁하는 장의 산물로서 정치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셋째, 사회적 기반과 헤게모니의 정도가 아주 다양한 상이한 형태의 지배가 존재한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버마스의 공론정치란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합리성에 바탕한 <동의에 의한 지배>이며, 공공영역 혹은 공론장이란 이러한 공론정치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는 기제로서, 직접적으로 권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정당 등 정치사회의 영역의 바깥에서 여러 사회세력들이 공론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³⁾

반대로 그람시의 헤게모니란 <기동전>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혁명을 위하여 시민사회의 영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투쟁하는 <진지전>을 의미한다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담론이란 이념이나 학설처럼 엄밀하고 일관성을 가진 논리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특정 사상, 이념, 철학에 입각하여 하나

3) 하버마스의 후기 공론장에서는 참여, 연대, 법과 유리 등이 중시되지만,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민주화 이행기인 6공화국에서는 후기 공론장의 특징인 <정당성의 위기>보다는 <합리성의 위기>가 오히려 문제시 된다는 점에서, 고전적 공론장의 정의가 보다 유용하다고 보았다. 다만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이래의 공론장 분석에서는 후기 자본주의적 공론장의 개념이 유용해지기 시작한다고 하겠다.

의 통일된 관점을 가진 패러다임 혹은 언술체계이며, 담론투쟁이란 이러한 서로 다른 복수의 패러다임들이 열린 공론장에서 상호 공존하고 경쟁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모델 설정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첫째 담론은 지배-도전의 권력관계에 상응하여 지배담론과 도전담론으로 대별한다. 여기서 도전담론은 김도종의 지배담론-저항담론-대항담론의 3분법에서 저항담론과 대항담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지배담론은 조희연 등의 분석을 토대로 <방어적>, <선제적> 기능으로 양분한다. 여기서 방어적이라고 함은 기존의 지배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서라도 그 헤게모니적 성격을 지속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선제적이라고 함은 기존의 지배담론에 없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헤게모니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도전담론은 경쟁적, 투쟁적 담론으로 다시 구분한다. 여기서 <경쟁적>, <투쟁적>은 각기 김도종의 저항담론, 대항담론에 해당된다, 즉 경쟁적이라 함은 지배담론과 동일한 담론을 추구하면서 이를 세부 항목에서 비판함으로써 결국 지배담론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투쟁적이라고 함은 지배담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공론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 지배담론과 도전담론은 각각 두가지 유형의 조합으로 4가지

형태의 담론구도를 형성한다. 방어적 지배담론 - 경쟁적 도전담론의 <체제안정형>(Ⅰ) 담론구도, 선제적 지배담론 - 경쟁적 도전담론의 <체제교란형>(Ⅱ) 담론구도, 방어적 지배담론 - 투쟁적 도전담론의 <체제충돌형>(Ⅲ) 담론구도, 선제적 지배담론 - 투쟁적 도전담론의 <체제과국형>(Ⅳ) 담론구도가 그것이다.

다섯째, 여기서 (Ⅰ), (Ⅱ) 유형은 현실적으로 공론장이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하버마스 유형>과 친연성을 갖고 있으며, 반대로 (Ⅲ), (Ⅳ) 유형은 외부의 혁명전략에 의해 공론장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그람시 유형>과 친연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화 이후 상황에 국한되며, 민주화 이전에는 지배세력의 강력한 힘의 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분류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 담론의 대립모형>

도전담론 \ 지배담론	방어적	선제적
	경쟁적	체제안정형(Ⅰ)*
투쟁적	체제충돌형(Ⅲ)	체제과국형(Ⅳ)

* 여기서 체제안정, 교란, 충돌, 과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국의 안정이나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체제교란 속에서도 정국은 안정될 수 있으며 체제안정 속에서도 정국은 불안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6공화국의 주요 담론투쟁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6공화국 민주화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대상과 범위

본 논문은 6공화국, 더욱 엄밀히 규정하면 노태우 정부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노태우 정부 전시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올림픽 이후부터 91년말까지 시기를 한정하였다. 올림픽 이전 시기를 배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88년 5월에 한겨레신문이 창간됨으로써 그때까지 지하 팜플렛 혹은 半합법적인 부정기 간행물로 담론투쟁을 벌이던 진보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공론장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6공화국 출범과 곧 실시된 제13대 총선거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에서는 이른바 <집권초 허니문 기간>과 함께 <올림픽 휴전>으로 인하여 공론장이 아직 틀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공론장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며 다만 이념적 대립구도가 완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올림픽 이후라는 점에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다.

대상 시기를 91년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91년 하반기에 이르면 공론장에서의 담론투쟁의 쟁점이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그후 92년부터 6공화국말까지 공론장은 새로운 쟁점의 부각없이 국회의원선거와 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 내분과정 그리고 대통령선거 등 제도정치의 쟁점을 반영하는데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시기를 전후하여 UR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화 담론의 맹아가 나타나고 또한 환경

문제 등 포스트 모던의 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공론장의 본격적인 주요한 담론으로 부각되는 것은 문민정부하에서 였다.

본 논문에서는 담론투쟁의 주체로서 세 개의 이념적 그룹을 상정하였다. 물론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이른바 <1노 3김>이 주역이었고, 이들은 초반에는 여소야대를 통해 1노 대 3김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다가 3당합당을 통해서는 <노태우-김영삼-김종필 대 김대중>의 구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공론장에서는 대체로 보수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때까지 보수, 자유진영 간의 구분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제도 정치에서는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의 지배연합 참여 등 양자가 중첩되고 또 혼재하는 양상도 보였지만 대체로 보수진영은 구여권 일각과 그 지지 세력, 자유주의 진영은 대체적인 제도정치권 세력- 즉 구여권의 일각, 3당 합당을 통해 지배연합에 참여한 김영삼 등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 그리고 야당으로 남았지만 김대중 세력의 일부분- 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급진주의 진영은 제도정치권에서는 김대중 추종세력의 일부분과 재야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세력을 대표하는 매체로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을 선정하였다. 먼저 급진세력의 매체로서의 한겨레신문은 스스로 진보적 입장을 표방하였고, 또 이를 견지했다는 점에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승우, 239-248쪽). 다만 한겨레신문이 제도정치와의 관계에서 김대중에 대한 <지지> 혹은 <비판적 지지> 입장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우리 일간지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념적 보수주의를 표방한 신문은 없었다⁴⁾.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서울신문이 노태우 정부 뿐만 아니라 전통적 지배집단의 시각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보수에 그중 근접한 매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6공화국 정부 자체가 나름대로 자유주의적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보수 일변도라고만은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주의적 입장의 매체이다. 우선 대부분의 매체들은 권위주의 시대, 정권에 굴종하면서도 기본적 이념적 노선에서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 왔으며, 특히 6.29 이후에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적극 옹호해 왔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주류사회를 대변해왔다고 평가받은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배담론 내 보수적 분파로 서울신문을, 지배담론 내 자유주의적 분파로 조선일보를, 그리고 급진담론으로서는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이 고정적으로 한 이념만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념적 경계선을 넘나들기도 하였다. 다만 전반적 성격에서 이러한 이념적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사실로 국한하였다. 각 신문은 사실 이외에도 칼럼과 논평 등을 통해 공론을 이끌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들이

4) 언론사주의 성격으로 보아 세계일보나 국민일보가 보수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신문들이 본격적으로 보수를 표방한 것도 아니며 또 영향력 면에서 미미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중앙일보가 재벌의 소유로서 그 경제적 이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수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시각이 컸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도 자유주의적으로도 단정하기 힘들므로 여기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더욱 중요한 국면도 적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대상으로 지속성과 일관성을 살펴볼 때는 사실이 보다 의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간적으로는 88년 10월부터 91년말까지의 39개월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신문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사실을 검색하였고, 그 중에서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변적 이슈 및 반복적 논조를 제외하고 약 300여 개의 관련 사실을 집중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에 있어서는 각각의 이슈에 따라 각 신문의 시각을 비교, 대조하는 정성적(qualitative)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6공화국 공론장과 담론투쟁의 성격과 특징을 이념적 성향별 3개 신문의 사실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민주화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Ⅲ. 한국정치에서의 민주화와 공론장의 구도

1. 공론장의 환경 및 담론의 이념적 분류

근대의 공론정치는 국가부문의 의회정치와 시민사회의 정치영역 즉 공론장으로 2중 구조를 갖고 있다. 권위주의 하에서 한국의 대의정치는 굴절, 파행을 거듭해 왔다. 헌정 중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정선거, 패권정당체제 등을 통해서 대의정치가 운영 면에서 또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왔으며, 유신헌법과 같이 대의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부정한 경우도 있었다(심지연, 227-228쪽). 지배세력은 의회를 민주주의의 장식물로 간주하였고, 도전세력 역시 의회를 전면투쟁을 위한 교두보로 간주했다. 그 결과 의회는 타협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의사형성의 장이 아니라, 정파간 특수 이익간의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퇴색하였다.

시민사회 역시 굴절과 우여곡절을 걸어왔다. 조선조와 일제시대를 걸쳐 나름대로 명맥을 이어온 공론장의 전통(김용직b, 190-194쪽)을 바탕으로 건국 이후 기본 틀은 갖추었지만 경향신문 폐간, 동아일보 광고탄압사태에서 보듯이 언론사의 존폐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한계와 제약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급진적 담론을 대변할 일간지 역시 6공화국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⁵⁾ 그러나 이러한 파행적 의회정치와 제약적인 공론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공론장은 헌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87년 6월 성공적인 민주전환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5) 여기서는 8.15 해방공간과 4.19 이후 제2공화국 같은 시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먼저 한국의 공론정치와 공론장이 놓여진 기본적인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서 설정되었고 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분명 한계도 있었다. 무엇보다 냉전적 상황으로 인해 민주화 담론은 상당기간 냉전담론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유교적 이념 역시 막강하였다. 그 결과 급진담론은 대두할 공간이 없었으며, 보수적 담론과 자유주의 담론 역시 오랫동안 미분화 상태에 있었다. 그렇지만 유신에서 보듯이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유교적 이념 역시 뚜렷한 대안적 정치이념이라기 보다는 권위주의적 문화 등 하위 정치문화로서 영향력을 발휘했을 뿐이다(김용직a, 1쪽).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 헌정사의 기본적인 가치로 작동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현실정치와 담론투쟁을 일정한 한계 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둘째 공론장은 그 자체의 합리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보다는 정치세력의 강력한 동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시민사회의 부재 혹은 미숙으로 인해 공론장은 지배세력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침투 및 동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공론장은 지배세력이 경제개발과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 담론을 침투시켜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국민들을 설득, 동원해 내려고 하는 힘과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의존하여 야당 및 도전세력이 지배세력을 공격하는 충돌의 장소였다. 공론장은 지배집단과 도전집단의 투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부닥치는 곳이었다(조희연, 35-36쪽)

담론은 담지주체의 정치사회적 세력관계에 따라 온건 혹은 급진지향이나에 따라서 보수적, 자유주의적(혹은 개량주의적), 급진적 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각 담론의 구체적 내용은 시기적으로 편차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성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적 담론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정론과 반공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론을 주장하였다. 즉 87년 이전의 보수담론은 <극우>를 특징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유주의적 담론은 자유민주주의에 보다 충실하여 지배집단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보수담론에 포섭되는 <자유주의의 어용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셋째 급진적 담론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의 내용을 갖는 것인데 우리 담론사에서는 오랫동안 <소별과 비합법화> 상태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역사의 전면에 대두되면서⁶⁾, 급진적 민주화 혹은 변혁, 노동, 분배 중시 및 북한의 주장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각 담론의 이념적 분류는 무엇보다도 의회주의, 제도 및 폭력에 관한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보수담론은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적 담론에서는 제도는 특히 의회주의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가진 자의 절제, 도덕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의회주의에 바탕한 꾸준한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급진담론은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서는 의회주의는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

6) 급진이념의 대두에 대해서는 광주사태 이후 재야세력의 새로운 대안 모색, 사회구성체 논쟁 등 다양한 요인과 과정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북한의 공작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고된 것이 없다.

에 따라서는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권위주의 하에서는 보수적 담론이 자유주의 담론을 포섭하여 지배담론을 구성했으며, 반대로 도전담론은 자유주의 담론을 기축으로 하되 80년대에 들어와 새로이 급진 담론이 대두되면서 양자가 함께 도전담론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배담론은 50년대에는 반공주의, 60년대 이후 87년까지는 근대화 혹은 개발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물리적 억압을 동원하였고, 반면에 도전담론은 근대화 담론의 종속성과 독점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민주주의 담론을 중점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희연, 50-51쪽, 81-82쪽).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이념적 성격을 초래한 요인으로서는 첫째 분단과 6.25로 심화된 레드 콤플렉스에 기반한 반공주의, 둘째 강한 국가-약한 사회의 전통, 셋째 북한까지 영향을 미친 성장 및 개발주의, 넷째 개발독재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왜곡, 고착된 지역주의, 다섯째 가족주의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조희연, 47-50쪽).

2. 역대 정권하의 공론정치와 공론장의 기본구도 및 특징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보수세력간의 경쟁 속에서 자유당 독재체제가 성립되었다. 즉 보수세력의 한 분파인 자유당이 여타의 보수분파들로 구성된 야당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가운데, 통합야당인 민주주의가 출현하여 이에 강력 도전하는 구도였다(한배호, 65-122쪽).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강력한 반공이념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이념이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공론장에서도 급진담론은 자취를 감춘 가운데, 보수 담론과 자유주의 담론은 미분화 상태에 있었다. 원조경제 속에서 경제담론 자체가 부재하였고 통일이나 민족문제에 있어서도 강력한 승공통일, 북진통일론만이 존재하였다. 여기서 자유주의 담론은 강력한 반공담론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중심으로 민주화 담론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권의 대립구도와 맞물려서 지배담론은 철저한 반공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혹은 극우적) 입장에 서고, 도전담론은 의회주의에 충실해야 한다는 보다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서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경쟁하는 체제안정형(I) 담론구도가 성립되었다고 하겠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구조는 두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3공화국 시기에는 제도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상대적으로 충실한, 경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유신 시기에는 이념적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고, 제도적으로는 야당의 집권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면서 집권세력의 패권체제를 보장하였다. 여기서 의회는 장식적 성격을 갖게 되었고 도전세력은 <장외>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

공론장과 담론 구도 역시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급진 담론은 지하로 들어갔고, 지배세력의 선제적인 담론 제기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노력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민주화 이념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었다. 즉 집권초기부터 박정권은 민족주의를 강조해

왔으며(전재호, 91-93쪽), 유신 시기에는 민주화의 내용 자체를 변형시키려 했다. 두 번째는 경제담론,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장담론으로 중심을 전환시키려 한 것이다.

지배담론의 이러한 선제적 노력은 많은 갈등을 불러왔다. 지배담론의 민족주의화 경향에 반해 도전담론이 오히려 반공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배담론의 성장담론에 대해 도전담론은 처음에는 속수무책이다가 점차 성장의 결과 분배문제가 대두되면서 조심스럽게 분배담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배담론이 오히려 급진적 모습을 보여주었고, 도전담론이 보수적 성격을 보여준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지배담론은 여전히 강력한 반공노선을 견지하였고 또한 성장이 축적되면서 점차 보수적 성격을 강화해 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도전담론 역시 분배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개량적 혹은 급진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지배-도전담론 모두 급진-보수의 혼합물, 즉 미분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박정희 시대의 담론구도는 지배담론이 민족주의, 통일, 성장 등 개량적 혹은 진보적 담론을 선제적으로 제기한 데 반해, 도전담론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반공의 보수적 담론을 고수함으로써 체제교란형(Ⅱ) 구도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제5공화국은 이념면에서는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복귀하지만, 정치체제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간선제와 집권당의 패권정당체제를 고수한다(심지연, 324-333쪽). 그러나 1985년 2.12 총선 결과 강력한 야당이 탄생함으로써 민정당 패권체제에 이상이 발생한다(심지연, 339-354쪽). 이후 야당과 시민세력이 합세하여 민주항쟁을 벌인 결과, 1987년 6월의 민주전환을 이룩하게 된다.

이 시기 공론장의 담론구도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먼저 지배담론은 철저한 보수적 성격으로 전환한다.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민족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복귀한 것이다. 또한 성장담론을 여전히 강력히 고수한다. 그런 점에서 정통 보수담론의 특성을 보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도전담론은 지배담론의 민주화의 위장성과 구호성을 폭로하고, 성장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급진 담론이 대두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이론에 바탕한 급진적 민주화, 분배 그리고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도전담론 내에서 강력한 교두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서 한국 공론장의 이념적 분포는 보수적, 자유주의적, 급진적 담론의 대립이라는 기본적인 구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 담론의 구도를 보면, 5공 전반기에는 다시 체제안정형(I) 담론구도가 형성 조짐을 보이다가, 바로 지배담론의 안정론, 성장론이라는 방어적 성격에 대하여 도전담론의 민주화론과 분배론의 투쟁적 성격이 맞서는 체제충돌형(III) 담론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3. 민주화 이후 공론정치와 공론장의 기본 특징

6.29 이후 87년말 대통령선거와 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지역분할 체제에 입각한 1노 3김의 여소야대가 형성됨으로써 6공화국의 정국구도가 완성되었다. 이 시기 정치구도를 볼 때 이념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졌고, 정치체제 역시 충분히 경쟁적인 것이 되었다. 한편 6월 항쟁의 선도 역할을 하였던 급진세력은 6.29 이후 극렬한 노동투쟁 노선으로 인해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특

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평민당을 필두로 한 제도 정치권에 흡수됨으로서 그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다.

공론장 역시 6.29를 거친 6공화국에 들어오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보수주의의 합리화>, <자유주의의 독자화> 그리고 <급진주의의 분화>가 발생한 것이다.

먼저 지배권력 내에서 온건분파가 주도권을 장악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보수담론 역시 급격히 온건, 합리화하면서 극우적 목소리는 공론장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의 독자화란 그동안 개량주의 담론으로 표출되던 담론이 자유주의 시각을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과거 개량적 혹은 자유주의 담론을 표방하면서 보수담론 속에 포섭되어 있던 자유주의 담론이 독자화 하고 개혁주의화한 현상이다. 또 하나는 80년대 중반 이후 급진 담론과 투쟁을 같이하던 자유주의 담론이 87년 6.29와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급진적 이념과 결별하고 독자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급진주의의 분화란 바로 이러한 5공하 반체제 내에서 급격히 성장해 오고 6.29 이후 자유주의가 독자화해 가는 가운데 대두된 비판담론을 가리킨다고 하겠다(조희연, 43-50쪽). 그 결과 공론장은 보수, 자유주의, 급진의 3 담론의 정립체제가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당시 이들 각기 이념적 세력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의 윤곽은 그려볼 수는 있을 것이다. 먼저 13대 대선의 득표율을 분석해보면(공보처, 61쪽), 이념적 보수세력은 노태우후보의 득표율인 36.6%와 김종필 후보의 득표율인 8.1%의 합인 44.7%, 혹은 13대

총선의 득표율(공보처 86쪽)인 민정당 33.9%와 공화당의 15.6%의 합계인 49.5%를 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진보세력은 13대 대선시 김대중의 득표율인 27%, 혹은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의 19.3% + 기타정당 2.6%인 21.9%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88년경 실시된 대학생 및 고교생의 민주의식을 조사한 자료에서는 보수 33.2%, 온건 33.3%, 급진 33.5%로 나타나 있다(어수영, 221-226쪽). 한편 6공화국 초기 여소야대 시절에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우익이 47%, 중도가 25%, 좌익이 28.9%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익 중 극우는 2.6%로서 나머지 우익은 온건한 우익보수라고 한다. 그리고 동 조사에 의하면 경제, 사회적으로는 좌익의 비율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신도철 등, 161-164쪽).

이상의 자료를 참고하면 진보세력은 10-20%선에 있으며, 보수와 자유주의세력은 서로 섞여있는 가운데 그 규모는 각기 40% 내외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3당 합당 이전의 공론정치와 담론구도

1. 정치사회적 환경

6공화국 출범 이후 올림픽까지의 시기는 집권초 허니문 기간과 겹쳐 정국은 일종의 탐색전을 펼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7.7 선언을 통하여 과거 도전세력들이 적극 제기해온 통일담론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올림픽 이후 여소야대의 국회는 5공 청문회를 개최, TV 생중계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5공 청산이 최대 이슈로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전대통령의 백담사행 이후 89년 들어오면서 5공청산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당간의 합종연횡이 펼쳐졌다. 먼저 중간평가가 이슈화되었으나, 정부와 평민당의 합작으로 이를 보류. 무산시켰다. 그러다가 서경원 의원, 문익환 목사, 그리고 임수경 등의 방북으로 김대중 총재의 검찰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오히려 반평민당 연합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재야세력은 민주화 이후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여 부문단체를 결집하고 또한 포괄단체로서 전민련을 건설하였다. 아울러 재야 인사들의 연이은 방북은 북방정책의 문제점을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혁신이 양분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으며, 동구권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전환 속에서 5공 청산을 마무리 짓고 3당 합당이 이루어 졌다.

2. 보수 담론

가. 민주화 관련

보수적 담론은 원래 정권의 <단절 보다는 계승, 발전론>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5공청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청산의 당위론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비교적 합리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3청 교육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를 크게 개탄하였고(서울, 88. 10.7), 기업에 대한 강제성 모금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불법>을 비판하였다(서울, 88. 11.8). 다만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질의자들의 인기위주의 저질발언을 크게 비판하는가 하면(서울, 88. 11. 24), 증인으로 나온 과거 실력자들, 즉 군 수뇌부들의 책임회피성 <당당하지 못한> 자세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기도 하였다(서울, 88. 11. 23).

한편 5공 청산의 해법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여론보다는 이성적인 합의에 따른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의 청산>을 주장하였다.(서울, 88. 10. 5, 10. 26). 그러나 전씨 측근 구속이 10명 선에 이르고 5공에 대한 반감이 더욱 확산되면서, 5공화국측은 실기하지 말고 <사과 및 해명>을 하는 <시급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서울, 88. 11. 13). 11월 23일 발표된 전두환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이제 <사죄와 은둔>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자고 호소하면서, 이것으로 5공청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야당 지도자들이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서울, 88. 11. 24, 11. 25, 11. 26). 또한 노태우대통령의 11.26자 특별담화에 대해서는 “이제 전씨와 제5공화국은 역사의 장에 묻어야 할 때가 된 듯하다”고 착잡

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은닉된 정치자금에 대한 보장 수사>를 전제로 <관용>으로 매듭짓고,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서울, 88. 11. 27). 그리고 검찰 주도의 5공비리 수사 결과를 수용하여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마무리 지을 것을 계속 주장하였다(서울, 89, 2. 1).

5공청산론이 잠복된 가운데, 중간평가가 5공청산의 한 방법으로 대두되는데 대해서는, 이는 정권의 운명을 건 일전이라는 점에서 <신중론>을 제기하였고(서울, 89. 3. 1). 도전담론에서 제기한 중간평가 유보 혹은 연기론에 대해 찬성하면서 <공약한 사람이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하였다(서울, 89. 3. 5, 3. 14). 마침내 중간평가가 유보된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서울, 89. 3. 21).

5공청산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조기 종결론>을 주장하였다(서울, 89. 5. 23). 특히 청산이 안 될 경우 노 정권 퇴진과 연계시킨다거나 <예산안 연계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청산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서울, 89. 10. 13, 10. 29). 특히 89년말 야당들의 청산타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노대통령의 결단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다(서울, 89. 24, 12. 8). 그리고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 합의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연내 마무리>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서울, 89. 12. 17).

보수담론은 <과잉민주화론> 특히 89년 이후 운동세력의 결집과 폭력노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재야단체의 결집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폭력노선을 크게 경계하면서 공공의 질서와 안녕 및 의회

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서울, 89. 1. 24). 특히 전 교조 설립추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교원은 스승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도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서울, 91. 5. 14, 6. 15). 학원가 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교수들에 대한 학생폭력이라는 <패륜성>을 비난하였고, 반미 구호가 갖고 있는 <편향성>을 비판하였다. 또 <전두환-이순자 체포조>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난장판 증후군>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공권력의 무력화>를 크게 우려하였다(서울, 88. 11. 23, 11. 12, 10. 16, 11. 4, 10. 9, 11. 12, 11. 29). 다만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진 자들의 도덕성>과 <경쟁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하였다(서울, 89. 1. 1, 1. 11). 그 외에도 파업근로자들의 집단 린치사건, 즉창으로 무장한 농민들의 방화 등을 극렬 체제전복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이러한 불법폭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자세를 촉구하였지만, 일선 경찰서에 M-16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서울, 89. 4. 15, 2. 15, 2. 19, 2. 7, 3. 3).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부사 <동의대 참사사건>으로 보수담론의 입지는 크게 강화되었다. 일단은 모든 입장의 담론들이 폭력을 불사하는 학생들의 무모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였다(서울, 89. 5. 4/ 조선, 5. 4/ 한겨레, 5. 5). 그러나 보수담론은 정치권과 지식인들의 양시양비론 같은 판단 회피적이고 눈치보기식 대응이 이러한 결과를 빚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서울, 89. 5. 4).

이러한 폭력비판론은 정치권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계개편론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5공청산 과정에서 야당

대표들이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 크게는 <대권경쟁의 라이벌 3김 씨>의 문제로 인해 5공청산론이 <소모적이고 당략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서울, 89. 1. 16/ 조선, 88. 11. 30).

특히 89년 말 5공청산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다시 정계개편론을 적극 제기하였다. 여소야대의 4당체제는 정치 불안을 안고 있는 체제였고 국내외의 새로운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부적당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새로 나타나는 보수대연합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파벌정치와 이합집산이 가져올 정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정치인들만의 합의가 아닌 국민적 합의로 뒷받침되는 정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서울, 89. 12. 31, 90. 1. 9).

나. 경제 관련

경제 분야에 관한 한 보수담론은 극도로 약화되었다. 정부 역시 안정과 분배에 무게를 두고 있었으며, 공론장에서도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담론은 수면 하로 잠복하였다.

물가, 수출, 성장 등 각종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서서히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지만, 처음에는 이 역시 경제의 흐름과 체질이 바뀌는 과정 즉 개혁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경제주체의 노력에 따라 성장의 잠재력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시각

을 보였다(서울, 89. 6. 3).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소비가 증가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점차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서울, 89. 9. 24/ 조선, 89. 10. 3).

다. 통일관련

통일담론에 있어서는 정부의 7.7선언 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우려하는 시각이 표출되었다. 특히 자유민주적인 입장을 보이던 측에서 오히려 보수적 시각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무엇보다도 7.7선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심스러운 경각심이 대두되었다.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침과 무력 불사용>의 공동선언을 제안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이다(조선, 89. 10. 20).

한편 불법 방북한 문익환 목사에 대해서는 <소영웅주의자>로 규정하고, 그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념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서울, 89. 4. 5/ 조선, 3. 28). 이와 관련하여 문목사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 김대중 총재를 비난한 반면, 문목사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한 김영삼 총재의 자세는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서울, 89. 3. 31/ 조선, 3. 28, 3. 31). 또한 임수경 및 문규현 신부 방북 등에 대해서도 전대협이 이중적 처신과 평민당의 무책임성, 그리고 사제단의 현실적 <편향성>을 비판하였고, 특히 임수경과 문신부의 판문점 귀환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8월 공세>라고 경각심을 고취하였다(서울, 89. 7. 1, 7. 15, 7. 27/ 조선, 89. 3. 28, 3. 31, 6. 18, 7. 1, 7. 2). 이러한 가운데서 박철언 장관의 <비밀 방북설>로 인하여 대북 접촉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자, 이제는 대북 창구나 형식도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나아가 7.7선언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서울, 89. 8. 8/ 조선, 89. 8. 8, 7. 7).

3. 급진담론

가. 민주화 관련

먼저 5공청산에 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청문회를 통해 첫 이슈로 부각된 <3청 교육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군 민주화>의 필요성, 즉 <군에 대한 문민우위> 문제를 제기하였다(한겨레, 88. 10. 7). 특히 5공화국 출범과 관련된 <언론 통폐합, 어용 언론>의 이슈를 적극 제기하면서, 동아, 조선 등 기존 언론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조선, 동아의 사주가 <태평회>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언론 통폐합에 깊숙이 개입, 계열사의 <주문>보다 많은 언론 종사자들을 해직시켰다고 비판하면서, “한술밥을 뒤엎고, 사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발행인들을 당장 청문회에 불러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청문회를 <제도언론 청산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8. 10. 12, 11. 23, 11. 1). 뿐만 아니라 “김상만, 방우영씨와 역사의 거울: 친일에서 군사독재와의 밀월까지” 제하의 사설에서 조선-동아의 일제하 행태문제까지 화두로 제기하였다(한겨레, 88. 12. 15).

기업에 대한 강제성 모금에 대해서는 지배담론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특히 친인척 비리 과정에서 청와대 팀이 개입된데 대한 책임추궁과 돈을 갖다 바친 재벌 역시 책임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담론들과 더불어 한 목소리를 내었다(한겨레, 88. 10. 16, 10. 28, 11. 7, 10. 25).

한편 청문회의 일부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질문자의 <질적 수준>도 문제이지만 응답자들의 <불건적 태도>와 <거짓증언>을 더욱 심하게 질타했으며(한겨레, 88. 11.8, 12. 9), 나아가 청문회를 계기로 “폭력의 지배가 논리와 이성의 정치로, 밀실의 통치가 공개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청문회의 결함은 <과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그 중요성을 부정해야 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오히려 “청문회는 필요할 때마다 텔레비전 생중계로 계속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88. 11. 10, 12. 18, 12. 10).

<5공청산>의 해법으로 먼저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위해 반민특위와 같은 특별기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찰부와 특별법원>이 필요하며, <전두환 사면 절대불가>를 제시하였다(한겨레, 88. 10. 29, 11. 1). 이와 함께 5공 인사의 해외탈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전두환, 이순자 체포 결사대> 활동을 옹호하였다(한겨레, 88. 11. 2, 11. 5, 11. 29).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보복 불가론>을 통한 일종의 <타협안>이 제기되는데 크게 경계심을 표출하였다(한겨레, 88. 11. 8, 11. 12, 11. 16, 11. 18, 11. 20).

한편 전씨의 담화에 대해서는, 이것이 <감상론>과 동정심을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그를 청문회에 출두시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퇴임 후 정치자금 관리> 문제를 새로이 쟁점화 시키는 한편, 야당들에게는 정부·여당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한겨레, 88. 11. 24, 11. 25, 11. 26)

노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해서 이는 <청산>이 아니라 역사의 <암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하였다(한겨레, 88. 11. 29). 아울러 은닉자금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전씨의 해명과 사과는 거짓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40여개 재야단체의 <비상시국회의> 개최와 같이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한겨레, 88. 12. 24, 12. 10). 아울러 검찰의 <5공비리수사의 종결>⁷⁾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야 법조인으로 구성된 특별검찰부가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한겨레, 89. 2. 18).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혼돈된 시각을 보여 주었다. 처음에는 중간평가의 강행에 찬성하였다. 다만 여당이 승리하더라도 <국회해산>, 즉 정계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한겨레, 89. 1. 31). 그러나 집권측이 중간평가 준비를 진행시켜 나가자, 오히려 <5공청산 후 중간평가>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중간평가 유보 혹은 연기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중간평가를 통해 <5공청산>이 물 건너가는 상황이 올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이다(한겨레, 89. 2. 28, 3. 4, 3. 7).

이후에도 <5공청산 이후 중간평가>라는 입장을 통해서 <5공청산>담론을 재점화하려고 노력하였다(한겨레, 89. 3. 21). 아울러 <면책성 증언>은 수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타협론> 등 정치권의 청산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한겨레, 89. 5. 23, 8. 12)

7) 47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으로 5공비리 사건을 종결짓고 특별수사부는 해체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89년말, 야3당 총재들의 청산방안 합의에 대해서는 5공청산이 곧 민주화라면 이것은 몇 사람의 공직사퇴만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므로 <연내 마무리>에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도, 야3당의 해법이 미흡하지만 집권세력은 이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인적 청산>에 이어 <법적, 제도적 청산>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였다(한겨레, 89. 10. 14, 10. 2, 11. 2, 11. 11). 이와 같이 급진담론은 한편으로는 “<5공청산>은 그 이름과는 반대로 한낱 <술수>와 지역적인 협상의 놀음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도, “이제는 노태우 대통령이 결단할 때”라는 점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한겨레, 11. 23, 11. 30).

마침내 이루어진 5공청산 합의에 대해서는 진정한 <청산>에 크게 못 미치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폄하하면서 <국민대중의 여론을 정직하게 대변>하는 재야운동세력이 적극적인 비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겨레, 89. 12. 11, 12. 21). 특히 “세계 역사 속의 그 어떤 독재자가 살육과 부정축재에 대해 생시에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의 심판대에 순순히 나선 적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하면서<특별검찰부>의 설치를 거듭 요구하였다(한겨레, 90. 1. 4, 1. 13).

한편 공론장의 일각에서 대두되는 <과잉민주화론>을 경계하면서, 재야세력의 폭력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첫째, 운동권 세력은 폭력의 도구를 갖지 못해 실제 그다지 폭력적이지 않다는 점, 폭력의 책임은 집권층과 체제 측에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농산물에 대한 시위와 같은 폭력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근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가의 폭력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나갔다(한겨레, 88.

10. 6, 12. 28, 11. 20, 12. 31, 89. 1. 10, 1. 31, 2. 25). 또한 민주화로 인해 법과 질서가 붕괴되었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청문회의 성과>로 <주권재민>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배의 정의를 강화하는 것이 법과 질서보다 급선무라는 입장을 강조하였다(한겨레, 89. 1. 1).

89년 들어 재야세력들이 새로운 단체로 결집하는데 대해서는, 87년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정치노선의 차이 때문에 빚어졌던 운동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전민련 건설과정에서 크게 해소되었다고 의의를 부여하면서, 향후의 관건은 야당과 재야라는 이중구조의 조정이라고 보았다(한겨레, 89. 1. 22).

특히 전교조의 인정, 합법화를 강력하게 들고 나왔다. 무엇보다도 지식인 노동자도 노동자인 만큼 헌법상의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교육은 이적 이념이 아니라 민주화, 통일 의 이념이라고 강조하였다(한겨레, 89. 2. 22, 5. 28. 8. 15).

한편 파업과 시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한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맹공격 하였다. 첫째, 현 체제는 비민주적이다. 둘째, 전투경찰 특히 사복 체포조와 같은 불법, 폭력적 <백골단>에서 나타나듯이 공권력 자체가 <강패집단>이다. 셋째, 이들이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좌경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평가 취소 뒤 극우세력이 대두하는 가운데 정권은 제도권 야당들의 뒷받침을 받아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혁대결구도의 허구성>, <총파업설 유포의 음모>, <공안합수부의 불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나갔다(한겨레, 89. 2. 15, 2. 21, 2. 23, 3. 28, 3. 25, 4. 18, 4. 19, 4. 22, 2. 25, 4. 26, 4. 27).

정부의 <화염병 사용규제> 방침에 대해서는, “화염병/ 최루탄 금지

법을 동시에 만들라”라는 주장에서 나타나듯이 공권력과 화염병을 같은 차원의 폭력으로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냈다. 물론 일선 경찰서에 M-16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물론이었다(한겨레, 89. 3. 24, 2. 14)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부산 <동의대 참사사건>⁸⁾에 대해서는 운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재라고 판단, <일부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비판하면서 민주화운동은 <사려 깊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한겨레, 89. 5. 3). 그러나 한편 경찰 대응에도 문제점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켜 나갔다(한겨레, 89. 5. 9).

한편 보수진영이 <위기설>을 조작하여 <민주세력에 대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 <양심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반격을 가하면서 재야세력들의 각종 시위 및 반미활동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공권력의 부도덕성, 폭력성을 부각시켜 나갔다(한겨레, 89. 1. 18, 4. 21, 5. 10, 5. 11, 5. 13, 5. 14, 5. 19, 5. 24, 6. 2, 6. 18, 8. 12, 9. 12. 9. 22. 10. 12). 이와 동시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중의 수준이나 정서를 훨씬 앞질러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대중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충고하기도 하였다(한겨레, 89. 11. 7)

한편 공론장의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정계개편론에 대해서는 크게 경계심을 표출하였다. 특히 <중간평가론>이 보수-혁신 대립구도의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빌미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였고, 결국 야당의 일각이 집권당과 타협을 이룰까 염려하면서 이를 견제하였다(한겨레, 89. 7. 7). 5공청산이 지지부진한데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평민당의 <무기력>과 <타협적

8) 1989. 5. 3, 부산 동의대에서 농성중인 학생들이 경찰의 교내 진입을 막기 위해 불을 질러 다수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임.

자세>, 민주당의 <선명성이 쇠퇴한 지도노선>, 그리고 공화당의 <여당의 2중대>식 기회주의 노선이 문제이며 무엇보다 세 야당이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의식한 나머지 <보수>를 강조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한겨레, 88. 11. 30, 12. 2)

5공청산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정계개편론이 급부상하는데 대해서, 한마디로 정계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보수대연합>과 <색깔론>은 비현실적이라고 비난을 고조시켰다. “보혁 대결을 말하려면 혁신세력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계개편보다 민주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정, 민주, 공화 등 세당이 추진하는 보수대연합은 어느 모로 보나 국민대중을 납득시키기 어렵다....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옳다....보수대연합은 또 평민당을 고립시켜 지역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리라는 우려가 있다....보수대연합은 정치적 논리나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으며 나라를 분열시켜 극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였다(한겨레, 89. 12. 31, 90, 1. 7, 1. 16, 1. 21).

나. 경제관련

이 시기 공론장에서는 경제민주화, 특히 토지 공개념과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거의 컨센서스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한겨레, 89. 2. 19, 8. 31, 7. 11, 90. 1. 21/ 서울, 88. 10. 15, 89. 7. 8/ 조선, 88. 7. 2, 7. 13, 8. 3, 8. 17, 8. 30, 9. 6, 9. 29, 10. 9, 11. 11, 10. 29, 89. 7. 8). 이러한 가운데 물가, 수출, 성장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서서히 부상하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하였다. 경기에는 불안요인과 더불어 낙관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계하였다(한겨레, 89. 2. 26, 12. 5, 12. 14).

또한 보수담론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과소비론>에 대해서는, 이는 일부 상층 계층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직도 우리의 경우에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은 낮은 수준이며, 또한 세계적 추세에 비교하면 과도한 노동시간이라고 반박하였다.(한겨레, 89. 8. 9, 9. 30, 11. 4, 11. 18).

다. 통일 관련

정부의 7.7선언과 일련의 대북 유화조치에 관해서는, 그것이 과거의 대결노선을 버리고 평화지향적 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북방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사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안법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면서, 고위관리나 재벌기업가들은 이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버젓이 공산권을 왕래하고 교역을 해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인가?”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한겨레, 88. 10. 20, 10. 25, 89. 1. 15).

이러한 관점에서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문목사의 <진정한 뜻>은 외면한 채 <방식>만 두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행위는 정부의 통일논의와 교류독점 즉 <창구일원론>에 대한 이의 제기이며 또한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한겨레, 89. 3. 29, 3.

30, 4. 2, 4. 28, 5. 25). 따라서 문 목사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 김대중 총재는 지지하는 반면, 비판적 자세를 취한 김영삼 총재를 공격하기도 하였다(한겨레, 89. 4. 1).

임수경 및 문규현 신부의 방북사건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자세>를 비판하면서, 임수경이 혈기에 넘쳐 용어구사에 문제는 있었지만, 남북한체제를 고르게 비판하려고 노력했다고 옹호하였고, 사제단이 민주화 운동에 이어 이제는 통일운동에도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한겨레, 89. 6. 9, 6. 20, 7. 28, 8. 30).

4. 자유주의 담론

가. 민주화 관련

먼저 5공청산론에 관한 자유주의 담론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3청 교육대> 문제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는 점은 물론, 공권력이 <제도폭력>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비판하였다(조선, 88. 10. 7). 특히 신군부의 만행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불행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조선, 88. 10. 13).

기업에 대한 강제성 모금에 대해서는 보수담론과 함께 절차상의 <불법성 문제>와 더불어 집권 측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개탄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조선, 88. 10. 16, 11. 4, 11. 10). 특히 친인척 비리과정에서 청와대 팀이 개입된 것을 비판하면서, 또한 돈

을 갖다 바친 재벌 역시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였다(조선, 88. 11. 2, 10. 19)

전체적으로 청문회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질문자의 <인기전략>과 <질적 수준> 문제는 물론, 증언자 측의 <법적 방어권> 문제 등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였다(조선, 88. 11. 8, 11. 11).

<5공 청산>의 해법에 관해서는, 철저히 파헤치고 나아가 <참회와 사과 및 국민적, 국가적 원상회복>을 통해서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연말까지는 모든 <과거>를 청소하고 하루 빨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조선, 88. 10. 4, 10. 5). 그러나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5공비리>에 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5공파의 역사무대에서의 퇴장>과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하였고(조선, 88. 10. 20, 10. 28), 마침내 이제 상황은 “<前 대통령의 비리를 司法的 처리를 하거나 정치보복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이미 <원칙에 불과한 얘기>로 치부된 지 오래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전씨의 <은퇴>와 <필요할 경우 스스로 사법처리에 맡기는 자세>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조선, 89. 11. 13, 11. 5, 11. 6).

11월 23일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사과>만으로 사면할 수는 없으며, <신병 구속>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과오규명> 및 <광범위한 민주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치권, 특히 정작 중요한 <5공청산>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공론장의 흐름만 주시하고 있는 야당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자세를 질타하면서 정치권이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조선, 88. 11. 24, 11. 26).

11월 26일자 노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양시양비론적 입장에서 서서 한편으로는 전두환-최규하 양인이 증언대에 나오되 <망신주지 않는 방식>을 강구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天下大亂식의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天下를 크게 수습하는 일대 新국면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야당은 공론장의 흐름만 주시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하였다(조선, 88. 11. 27, 11. 29, 12. 20).

따라서 검찰의 <5공비리 수사의 종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특수부는 해체하더라도 <검찰 본래의 기능>으로 수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였다(조선, 89. 2. 1) 즉 현시점에서 <개혁종결론>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인격과 신변 안전이 존중되는> 선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다(조선, 89. 6. 9, 8. 11).

이러한 가운데 대두된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5공청산 입장에서 <정면 돌파론>을 주장하였다. 차제에 5공청산의 해법을 놓고 정권의 운명을 걸고 정면 승부를 걸어 도전 세력의 기를 꺾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조선, 89. 2. 25, 2. 5). 아울러 중간평가를 할 때, 야당도 분명히 정치적으로 무엇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선, 89. 2. 28, 3. 5, 3. 19). 그리고 중간평가가 끝내 유보된데 대해서는 노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치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계개편의 계기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였다(조선, 89. 3. 21). 다만 정치권이 타협해서 5공청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중간평가 유보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조선, 89. 3. 21).

야3당 총재들이 <인적 청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5공청산

방안에 한의한테 대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법적 논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임을 강조하는 한편, 5공청산 못지않게 <5공청산의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야당 역시 구체적인 수습방안을 제시해야 하다고 촉구하였다(조선, 89. 10. 7, 10. 13, 10. 21). 특히 노대통령이 야당으로 하여금 <과거>에서 손을 뗄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핵심인물들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처리, 둘째, 전-최 양씨의 증언문제에 관한 합당한 처리, 셋째, 5공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주요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의 문책과 퇴진, 넷째 모든 악행들에 대한 소상한 진상규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선, 89. 11. 24, 11. 17, 12. 8, 11. 13).

3당 총재회담의 11개항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비록 이것이 정치인들 간의 타협이지만, <민주화의 제도적 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환영을 표하였다. 아울러 이제 여야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 제반 법규의 개정작업과 경제위기, 민생 치안, 통일문제 등 당면과제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조선, 89. 12. 17, 12. 19). 마지막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에 대해서는 <부실한 증언>을 비판하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것으로 5공청산을 마무리 짓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조선, 90. 1. 4).

한편 6.29 이후 학원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격한 폭력노선이 대두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양시양비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먼저 폭력이 척결되고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관건은 결국 <민주개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수교를 한 헝가리에 대해 <두개의 한국 조작책동>이라고 비판한

학생들의 <교조성>에 대해서는 맹공격하기도 하였다(조선, 88. 10. 5, 11. 1, 11. 19, 12. 3. 12. 9). 또한 민주화로 인해 법과 권위가 붕괴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준법과 공존의 개념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등 <과잉 민주화론>에 가까운 시각을 보였다(조선, 89. 1. 1).

재야의 포괄단체인 전민련을 비롯한 부문별 단체의 출범에 대해서는 이들의 폭력노선을 경계하면서도 <공공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의회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민련의 정당화 움직임을 적극 환영하면서, 다만 레닌주의, 주사파와 같은 폭력노선과 단절하고 서구의 사회민주당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조선, 89. 1. 21, 6. 1, 9. 23).

전교조에 대해서는 참교육이라는 이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혹시나 교육계에서 <진지전>을 벌일 가능성,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들의 단체 구성권과 행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선, 89. 7. 26)

또한 재야세력들의 폭력시위, 파업에 대해서는 이들의 불법성과 함께 학생 및 교직원노조의 총장 선출권 요구 등 <무분별한 참여 민주주의>를 비난하면서도 노사분쟁의 경우 대부분 원인 제공자는 사용자측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중간평가를 유보함으로써 국면을 전환시키지 못한 정부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비판하였다(조선, 89. 1. 31, 2. 19, 3. 7, 4. 14, 3. 26). 이와 함께 일선 경찰서에 M-16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과잉대응>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조선, 89. 2. 23, 12. 18).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부산 <동의대 참사사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무모한 행동을 비판하면서, 무엇보다도 지식인을 비롯한 침묵하는 다수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특히 서민학련의 폭력노선을 비판하고, 차제에 <비폭력평화원칙>을 발표한 전대협 의 자세를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조선, 89. 5. 7, 5. 10, 5. 18).

그러나 정부가 비상조치 발동 등 좌경세력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과잉대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즉 <좌익세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의 원칙과 방법만을 써야 한다. 罪 되는 것은 오직 폭력혁명의 시도를 했거나, 아니면 불세비키의 계급독재를 추구했을 때, 그리고 北韓에의 흡수를 주장했을 때에 限定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화염병 투척이나 기물파손 또는 점거행위-방화행위도 刑法上 죄는 분명히 되지만, 그것이 곧 폭력혁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89. 3 25).

이와 함께 <중산층도 비위 맞추고 운동권도 비위 맞추는 식>의 모호한 평민당과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정계개편론을 적극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5共清算 뒤풀이 한마당을 보면서 적잖은 <危機的 징조를 예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조선, 88. 11. 30), “우리 사회의 정치적 쟁점과 주제는 분명히 기성의 與냐 野냐의 문제를 넘어서, 보수냐 변혁이냐의 근본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국면전환, 이슈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그 <保守>의 주도세력이 그야말로 汚辱스럽지 않은 정당한 民主的 보수라야 한다는 鐵則이다. 둘째, 변혁세력에 대응하는

보수 세력들의 연합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전반적 民主化가 확립되어, 보수 세력들 사이에 싸워야 할 일이 별로 없어야 하는데, 지금 自由主義者들이나 온건개혁주의자들이 과연 汎집권세력의 민주적 변신을 진실로 믿어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끝으로 보수연합은 반드시 革新세력의 합법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 만큼, 그렇다면 汎집권세력은 개혁주의적-의회주의적 혁신세력과의 공존과 그들의 참여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政界가 길게는 保-革 구조로 개편되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도 맞을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앞서 권위주의 잔재가 청산되어야 하고, 수구적 復古세력의 준동이 경계되어야 하며, 보수의 이름으로 非民主-舊惡-富의 독점이 호도되어서도 안 되며, 아울러 보수대연합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탄압의 再開를 합리화하려는 저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조선, 88. 12. 16).

아울러 야3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혁 쪽으로 나가되 재야세력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대통령과 3김이 <反수구-反급진> 원칙에서 개혁주의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향에서 정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특히 김대중 총재의 <민주 對 反민주>, <자주 對 反자주>, <통일 對 反통일>의 구분법에 정면 반대하였다(조선, 89. 11, 1. 19, 1. 24, 1. 29). 또한 그런 점에서 중간평가라는 정계개편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조선, 89. 3. 21). 한편 5공청산이 마무리되고 정계개편이 가시화되면서, “저급한 小政治와 黨爭政治로 많은 날들을 소진해 버리는 정치에서 탈피하여,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大政治의 시대로 빨리 넘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선, 89. 12. 30, 12. 31).

나. 경제 관련

성장-분배담론에 있어서는 모든 이념적 분과가 개혁적 입장에서 강력하게 일치를 보여 주었다. 특히 오늘의 갈등의 본류는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우리의 발전방식이라는 <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따라서 정치의 개혁 못지않게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개혁과 비용 때문에 다소간 성장이 침체되고 실업이 늘더라도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조선, 88. 10. 13, 8. 25. 89. 1. 5/ 서울, 88. 7. 14, 10. 15/ 한겨레, 88. 10. 18).

이러한 기조 위에서 토지공개념을 필두로 금융실명제 도입과 형평을 중시하는 조세체계의 전면 개혁을 주장하였다(조선, 89. 2. 16, 3. 2, 8. 25/ 서울, 89. 7. 8/ 한겨레, 89. 2. 19). 특히 재벌의 부동산 투기근절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5공 청문회를 통해 정경유착, 재벌 정치헌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재벌 억제에 대해서는 거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고 하겠다(조선, 88. 7. 2, 7. 13, 8. 3, 8. 17, 8. 30, 9. 6, 9. 29, 10. 9, 11. 11, 10. 29/ 서울, 88. 10. 15/ 한겨레, 88. 8. 31, 7. 11, 90. 1. 21).

이러한 가운데 물가, 수출, 성장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부상하는 <경제 위기론>과 관련해서는, 그 무해결성, 무책임성, 그리고 그 뒤 도사리고 있는 <제 몫 찾기>로 인해 오히려 위기탈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위기론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특히 백해무익하다고 보았다(조선, 89. 12. 12).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과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

기 시작하였다(조선, 89. 10. 3).

다. 통일 관련

7.7선언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찬성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침과 무력 불사용> 공동선언 제안⁹⁾ 같은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정치권 차원의 獨走>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사회주의권과의 교류, 협력의 통로를 정부-여당과 일부 재벌들이 독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조선, 88. 10. 20, 12. 27, 10. 15, 89. 8. 2, 9).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 대해서는 <통일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좋으며, 모든 통일은 善>이라고 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통치주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북방정책은 “문익환씨의 김일성 방문으로 의외의 기습을 받은 셈”이라면서 정부의 일관성을 상실한 대북정책을 비판하였다(조선, 89. 3. 28, 4. 4, 4. 11). 특히 박철언 장관의 <비밀방북설>과 관련하여 과문이 일자, 7. 7선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조선, 89. 7. 7, 8. 8).

5. 공론정치와 공론장의 구도

이렇게 보수, 급진, 자유주의 담론들은 민주화, 경제, 통일의 이슈를

9) 1988. 10. 19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대북제안임

놓고 다양한 대립구도를 형성하였다.

먼저 민주화라는 원론에는 모든 입장의 담론들이 컨센서스를 형성한 가운데, 5공 청산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자유주의 담론이 지배담론을 형성하고 급진담론이 이에 도전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정치권은 먼저 청문회의 TV 생중계를 통해 <5공 청산>을 민주화의 최대 의제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5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되는 가운데, 11월 23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지난 시대 모든 국경과오는 최고 결정권자이며 감독권자인 자신에 있으며, 자신의 139억과 연희동 자택 등 전 재산을 국가와 사회에 헌납 하겠다>는 내용의 대 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백담사로 은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다(공보처, 281쪽). 전씨 담화에 대해서는 공론장에서는 지배와 도전담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노 대통령은 11월 26일 시국과 관련 <특별담화>를 통해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포괄적 사과>, <재산헌납>, <은둔> 그리고 <민주제도 개혁>을 통해서 5공청산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을 개진하였다¹⁰⁾.

5공청산의 해법을 놓고 이렇게 공론장과 정치권이 모두 팽팽한 대립구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1. 26 시국담화>의 기초 위에서 <5공비리특별수사부>를 통한 보강 수사 및 추가 처리로 5공청산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공론장의 대립구도는 전혀 해소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89년에 들어오면서 공론장에는 변화가 왔다. 일차적으로는

10)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는 1) 대규모 사면 복권조치 2) 광주 민주화운동, 해직공직자, 3청 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3) 정치자금 양성화 추진 4)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등 비민주적 조항 개정 및 비민주적 제도와 관행 개선, 정비 5) 자유민주의 체제 수호 및 법과 질서 수호 등을 천명하였다.

여론의 흐름을 감당하기 힘든 정치권이 청문회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5공청산론의 동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격적인 <5공청산>에 앞서 정치세력들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정치권은 <중간평가>와 <공안정국> 시비 등 정치권의 내부의 갈등에 빠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먼저 <중간평가>가 본격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노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중간평가를 여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하고 지방자치제를 연내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간평가와 지방자치제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 중간평가를 통해 5공청산을 마무리 짓겠다고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로서 <중간평가> 문제는 <5공청산론>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야3당 총재와의 연쇄적 회담 후, 3월 20일 제1야당의 입장을 존중, 중간평가를 유보하겠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로서 5공청산은 종식되지 못했지만 <중간평가>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론장의 구도는 6공화국 출범 이래의 기본구도가 깨지고, 오히려 보수담론과 급진담론이 이유는 정반대이지만 정략상 일치하여 공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후 5공청산론은 공안정국 등 정국의 교착상태 속에서 수면 하로 잠복하여 간헐적으로 제기되곤 하였다.

한편 6공화국 출범 이후 줄곧 수세에 몰려왔던 도전세력은 89년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했으며¹¹⁾, 그 결과 정부와 거대 재야단체가 직접 부딪치는 국면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89년 3월 22일 공안장관회의를 갖고 좌익검거에서는 어디든 공권력을 투입하고 공공시설 피습 시에는 자위를 발동하여 무기

11) 1월 21일에는 포괄단체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결성되었고, 3월 1일에는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연)이 결성되었다. 또한 5월 28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되었다.

사용을 결의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3월 30일에는 현대 중공업 농성장에 경찰 9,000여명을 투입, 강제 해산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동의대 사건으로 보수담론이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는 5월 27일 화염병처벌법 등 6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6공화국의 민주화 실태를 놓고 지배담론의 <과잉민주화론>과 도전담론의 <과소민주화론>이 충돌하였다. 서경원의원 사건으로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수사를 받게 되자, 김대중 총재는 이른바 <공안정국론>을 제기하면서 재야노선에 접근하였고 평민당은 다른 야당들과의 거리를 넓히는 경향을 가속화하였다. 반면에 김영삼 총재는 오히려 보-혁 대결구도를 선호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가을 정기국회에 들어와 <연말 청산론>이 서서히 부상되기 시작한 가운데, 10월 13일 야3당 총무회동을 거쳐 10월 19일에는 야3당 총재들은 <인적 청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5공청산 방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5공 청사 당사자들의 반발과 평민당의 <법적 청산> 추가로 인해 5공청산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12월 15일 3당 총재회담에서 전두환 1회 국회증언 및 TV 녹화 중계, 정호용·이희성 공직사퇴, 이원조 국회고발 등 11개항에 최종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서 12월 31일에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이 파행 속에서나마 이루어진 가운데 <5공청산>은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5공청산이 마무리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노대통령의 소극적인 정치과 정치권의 눈치보기 결과 공론장이 활성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막판에는 도전담론조차도 여하튼 노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할 정도였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보수연대의 움

직임이 형성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보수세력인 공화당은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여당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고, 제2야당으로서 한계를 절감하던 민주당 역시 조심스럽게 집권세력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3당 합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6공화국 초반기에는 여소야대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주화 즉 <성장>보다는 <안정과 분배>에 중점을 두었다. 88년 10월 14일, 91년 1.1.부터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할 계획 등 올림픽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다. 여기서 담론은 전체적으로는 거의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리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고, 12,18에는 토지 공개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제민주화>조치를 추진해 갈 수 있었다. 다만 경제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보수적 시각과 자유주의 시각에서 경제위기론은 제기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였다.

민주화 이후 통일담론은 지배담론층의 선제적 성격을 갖는 것이 되었다. 권위주의 하에서 도전담론은 <선민주화 후통일> 혹은 <선통일 후민주화>의 쟁점화를 통해 통일담론을 제기한 바 있었지만 이는 도전담론권 내에 국한된 것이었다. 더구나 민주화 이후 6공화국 전반기에 도전세력층은 아직 <통일>에 대해 담론을 제기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때 노대통령은 1) 남북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2) 이산가족의 생사. 주소확인 및 자유왕래 3) 남북간 교역 개방 4)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대북

교역 불만대 5) 남북대표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6) 남북한 우방국들의 상호 우방국에 대한 관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7선언>을 발표하였다(공보비서실, 17-20쪽). 또한 88올림픽 폐막 이후에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서 나용배 부총리의 대북 경제 7개항 조치, 노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통한 남북 상호 불가침 제의 등이 이어서 발표되었다.

이 시기 도전담론은 원론적으로는 북방정책을 찬성하면서도 <창구일원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일담론>의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특히 이러한 투쟁은 재야세력들의 북한 방문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결론적으로 6공화국 전반기의 공론장은 내용상으로는 <민주화 담론>을 중심 축으로, 그리고 <성장-분배담론>과 <통일담론>을 보조 축으로 이루어졌다. 민주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즉 <민주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 <체제안정형>(I) 담론구도를 기본으로 하여, <통일담론>을 놓고 도전담론이 지배담론에 대해 주도권 쟁탈을 벌이는 <체제교란형>(II) 담론구도가 보조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론장이 보다 확대되고 신장된 가운데, 공론장 자체의 논리가 현실정치에 보다 많이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형 공론장>의 유형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특히 민주화의 당위성과 큰 방향에 대해서는 지배담론과 도전담론 모두가 컨센서스를 이룬 가운데 각론 및 추진상의 문제를 놓고 지배담론 내 보수분파와 자유주의적 분파 그리고 급진 담론의 3대 이념

적 분과가 각기 뚜렷한 특징을 갖고 상호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지배담론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한 <통일담론>에서는 총론상으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실천상의 문제를 놓고는 크게 지배와 도전의 양대 담론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성장-분배담론>에서는 민주화 담론의 연장성 속에서 모든 분과가 동의하는 <분배담론>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뚜렷한 대립구도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민주화 담론에서 5공 청산의 수습 방향, 전두환씨의 담화, 노대통령의 수습 담화, 청산에 관한 조기 타협론, 인적 청산을 통한 마무리, <법적 청산>문제의 추가, 최종 청산 합의 사항, 정계개편의 필요성, 정계개편 방법 등 정치적 이슈와 전교조 문제 등 일부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는 보수적, 자유주의적, 급진적인 3분과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청문회의 유용성문제, 언론개혁, 그리고 폭력에 대한 해결방법, 정당과 재야단체와의 관계 설정, 화염병 불법화 문제 등 주로 사회적 이슈에서는 <보수> 대 <자유주의 + 급진>의 2자 구도가 형성되었고, 통일담론에 있어서는 <보수+급진> 대 <자유주의>의 2자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담론을 대표하는 매체들은 전체적으로는 이념적 정체성과 일관성을 보였지만, 적지 않은 예외적 모습도 보였다. 먼저 보수적 담론은 개혁의 <조기 마무리>와 같은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적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담론과 심지어 급진적 담론과 목소리를 함께 하여 <분배> 이슈를 외친 것을 보면, 당시 성장 일변도

정책은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는 반증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념적 위상에 대한 <위장>이거나 <기회주의적 영합>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간평가론에서 나타났듯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철저히 정부의 태도를 추종하는 것은 서울신문이라는 관영 매체의 성격에서 나온 독특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담론 역시 전체적으로는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무엇보다 의회주의 노선을 강하게 견지한 면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원단체의 경우, 노동권은 보장하되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 <폭력혁명>을 규정하는 데는 비교적 엄격하며 최소한의 규정을 함으로서 집권세력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 정권의 이익보다는 철저히 체제의 위협에 민감하다는 측면 등도 자유주의적 특징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제를 달긴 했지만 보-혁 대결구도의 정계개편론을 적극 주장한 것은 다소 보수적인 측면을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폭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점, 또한 대북정책 등 통일담론에서는 비교적 보수적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급진적 담론이 친북한적 입장을 떠는 데 대해서는 철저히 강경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점, 또한 제도개혁을 중시하고 기본적으로 청산의 <조기 마무리론>에 동조한 것 등은 역시 보수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反김대중 노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유주의적 특징의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특히 조선일보의 특수성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급진담론은 특히 이념적 정체성을 강하게 보여 주었다. <상황 따라서>라는 단서가 있지만 폭력을 용인하고 의회주의보다는 군중노선을

추종한 것, 나아가 <제도폭력>이 더욱 큰 문제라는 인식, 분배의 정의가 법과 질서에 우선한다고 보는 점, 철저하게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점 등은 전형적인 급진이념의 특징을 보인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김대중에 대한 일변도 지지 자세는 모든 진보적 담론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한겨레신문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현실정치적 친소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²⁾

담론들은 또한 정치권 및 정부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5공청산 및 중간평가론 등 정치적 현안 및 통일담론에서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또한 급진 담론은 운동세력의 힘과 논리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 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외부 힘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게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정부와 정치권이 지도력을 항상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 노대통령 역시 공론장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기다리는 정치>를 하였으며, 정치권은 5공청산과 관련하여 청문회 생중계를 통해 비판여론이 확산되어 가도록 방치할 뿐 수습 노력은 보이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 공론장이 정치와 국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6공화국 전반기 공론장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보이면서, 때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한겨레신문의 친김대중 성향은 이후에도 운동세력 내에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V. 3당 합당 이후의 공론정치와 담론구도

1. 정치사회적 환경

1990년 1월 22일 민정, 민주, 공화의 3당 통합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출범함으로써, 6공화국 출범 이후 수립되었던 1노 3김의 여소야대의 구도는 민자당 대 평민당의 대립구도로 전환되었다. 평민당은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 정치로 맴돌면서 정국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거대한 여당은 이질적 성격으로 인해 내분에 빠지고 말았다.

재야세력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가운데, 정부와 정면충돌하는 대치상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공산권의 몰락과 심화되는 경제난 그리고 사회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재야세력의 자충수로 인하여 이러한 도전은 무력화되고 말았으며, 이후 야권은 <야당통합>과 <야권통합>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공산권의 몰락과 맞물려 북방정책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도 합의서 채택 등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2. 보수 담론

가. 민주화 관련

보수담론에서는 무엇보다도 3당 합당을 적극 지지하였다. 지난 여소야대의 구도를 <지역분과성, 1인 중심의 朋黨구조, 政略위주의 운용, 기회주의적 속성과 선명 투쟁위주의 대안 없는 비판이 낳은 대결구도>였다고 비판하면서 3당 합당의 정당성을 강조하였고, 이제 신당은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그러면서 신당은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온건 중도세력>영입과 <지역분과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서울, 90. 1. 23, 2. 1, 2. 10). 한편 평민당이 1천만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이라고 이를 폄하하였다 (서울, 90. 1. 25).

폭력문제에 관해서는 민주화 이후 <과격시위가 용인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입장에서, 재야세력의 <법정 난투극>을 비롯하여 날로 극렬화하는 각종 시위, 투쟁 및 극렬 파업사태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을 비난하는 한편, 이들 배후에는 <무장봉기까지 노리는 세력>이 있다고 경각심을 크게 고취시켰다 (서울, 91. 3. 6, 3. 18, 5. 2, 5. 3, 10. 31).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과격한 시위문화를 비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보였다.(서울, 91. 3. 6, 4. 28). 그러나 운동권 학생들의 연쇄 자살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불안감과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을 계기로 보수담론은 힘을 얻었다. 특히 <죽음의 고향을 걷어치워라>라는 김지하의 운동권 비판 칼럼과 박홍서강대 총장의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배후에 분명히 죽음을 조종하는 선동세력이 있다”는 <죽음의 블랙리스트> 발언을 계기로 운동권의 폭력노선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특히 박신

부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고 교육자다운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분신은, 사상과 행동의 혼돈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거짓 이념과 영웅 환상을 고취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죽음 찬미의 자살 증후군”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 91. 5. 10 / 조선, 5. 10). 또한 路祭 장소를 놓고 투쟁을 벌이는 운동세력의 비윤리성과 함께, 이를 계기로 노동계가 <총파업 선언>을 한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서울, 91. 5. 13, 5. 8, 5. 16, 5. 18).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일견 운동세력의 입지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지만, 폭력과 혼란이 지겨워 귀를 닫아버린 국민도 상당히 많다고 비판하면서, 이와 함께 <공권력의 부재상태>, 대안 제시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력, 그리고 이 와중에도 <개혁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거대여당의 무감각을 비판하였다 (서울, 91. 5. 8, 5. 12, 5. 30).

정원식 총리서리 피습사건에 관해서는 <나라를 테러한 悖倫>으로 규정하는 등 운동권 학생들의 도덕성을 크게 개탄하면서 이제는 시민이 나서서 <그만하라>고 외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91. 6. 5, 6. 7). 계속되는 시위상황에 대해서 “한줌도 안 되는 환상적인 혁명운동세력이 ‘汎’국민을 사칭.... 어린 학생들을 끌어들여.... 편향적 이념에 고착시켜 놓고 그들을 하수인 삼아 극렬한 사회파괴운동을 벌이면서 그걸 <국민대회>”라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특히 “이제는 <눈치 빠른 지식인들>도 이들에게 회의를 보내고 있다”고 대세가 반전됐음을 역설하였다 (서울, 91. 6. 15). 이후에도 보수담론에서는 각종 조직사건, 파업사태, 법정난동, 전대협대표의 파북사건, 파출소 습격,

화염병 사용 등 근절되지 않은 폭력사태¹³⁾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탈법성,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경각심을 고취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실시된 지자체 광역의회 선거에 대해서는 <정당들의 과열>로 인한 <혼탁>, <흑색선전>, <타락>상을 비판하면서 정당의 엄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서울, 91. 6. 2, 6. 18, 5. 26).

나. 경제 관련

89년 말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 경제에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선회에는 반대하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과 형평이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 6공화국 전반기에 추진되었던 경제개혁 조치를 <조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소야대 하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졸속 추진된 이법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하면서, 경제의 흐름이나 경제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는 입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정부가 시사하고 있는 유보, 연기의 사유가 석연치 않다고 하면서 <보완실시>를 주장하였다 (서울, 90. 1. 28, 2. 14, 3. 18, 4. 5, 3. 22).

그러나 물가폭등이 나타나고 수출 및 국제수지 적자 등 모든 부문에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총체적 난국론>이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보수담론은 임대자 보호법의 실패사례를 예로 들면서 여소야대하의 무책임한 정책이 문제였으며, 아울러 경제주체들의 심리이반현상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

13) <서울과학연구소 사건>, <법적난동 사건>, 전대협대표 파북 사건, 파출소 습격. 방화사건 등

다 (서울, 90. 5. 3). 또한 총체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운동 전개 of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서울, 90. 5. 7, 7. 5.).

91년 들어와서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경쟁력 복원 문제를 적극 제기하였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술선수범이 긴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과 재정긴축>, 공공요금과 유가안정을 포함한 <종합물가안정대책>과 함께 <정치권의 절대적 협력> 및 <근로자들의 구국적인 행동과 사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임금안정을 역설하면서, 총액임금제 실시를 위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준비>를 강조하였다.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노사화합과 근로자 주택공급시책 등 중단기 복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서울, 91. 1. 15, 1. 4, 3. 20, 7. 20). 또한 안정화시책 차원에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등 그동안 추진되어온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적극 거론하기도 하였다 (서울, 91. 5. 15).

재벌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측에서도 反재벌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신규 여신 중단을 통해서라도 재벌그룹의 부동산 매각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적 부분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를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특권층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서울, 91. 4. 28). 현대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물론 <자금의 武器化> 혹은 <현대라는 재벌의 이익 정치>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였다 (서울, 91. 10. 7, 12. 26).

이러는 가운데 보수담론은 외신을 통한 <한국경제의 추락론>을 국

내에 적극 소개하면서, 결국 노동력의 해이와 근로의욕의 저하 그리고 외화쓰기 경쟁 등 과소비로 인해 한국경제는 조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의욕과 절제된 생활이라고 하면서 국민 캠페인을 주장하였다 (서울, 91. 7. 17, 8. 5, 11. 7, 11. 18)

다. 통일 관련

공산권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변환의 물결 속에서 보수담론은 공론장에서 급격히 힘을 얻고 확산되었다. 특히 고르비의 실각과 쿠데타의 발생 및 실패는 역사의 대세이며 소련공산당의 붕괴와 소연방의 해체는 <불세비키적 이론과 실천의 완벽한 폐기>라고 보면서 공산권의 몰락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나갔다 (서울, 91. 8. 23, 8. 21).

남북관계에서는 먼저 위기에 처한 북한이 <보안법 시비> 및 <콘크리트 장벽 공세>¹⁴⁾ 등 선전전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북한의 형법문제를 거론하는 등 적극적인 반론을 전개하였다 (서울, 90. 5. 28 / 조선, 90. 9. 19). 또한 전대협대표의 평양방문 추진과 정부의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대학생 北韓방문단 허용>은 찬성하지만 <전대협>의 깃발로 방북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였다 (서울, 91. 6. 29, 7. 7)

고위급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침 협정>과 <군축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된 트릭이요 선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14)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북한은, 한반도의 분단장벽은 남한이 휴전선 근처에 세운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국제사회에 선전전을 벌였다. 국제사회에서는 장벽의 유무 확인을 문제 삼으면서 북한의 선전전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콘크리트 장벽은 휴전선 이남 후방에 세워둔 대전차 방어벽이었다.

남북대화는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직접교역>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남북간의 문제를 풀려면 결국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적극 전개하기도 하였다 (서울, 90. 6. 28, 8. 17, 8. 7, 1020).

한편 남북관계에서는 평소 자유주의적 시각을 보이던 측에서 오히려 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불가침 조약>등 북측의 선전전에 대해 <일부 고위층>에서부터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통일이 곧 올 것이라는 환상이나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하지 말라고 주문하였다 (조선, 90. 9. 3, 10. 21, 9. 8, 10. 21, 9. 16). 한편, 정부의 대규모 학생 교류 허용 조치는 북이나 운동권의 공세에 과민한 나머지 서둘러 <통일상품>을 급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연히 국민의 마음만 헛갈리게 할 <이벤트물>의 범람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였다 (조선, 90. 7. 9). 그리고 유엔 동시 가입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하면서도, 남북상주 대표부의 제의를 검토한다든가 정상회담 조기개최 등 과열상태를 염려하기도 하였다 (조선, 91. 5. 30).

이 시점에서 처음 대두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찰의 수용과 재처리 시설의 포기>가 중요하며, 이는 당연한 의무이지 흥정의 대상이나 양보의 결과일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장 포기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대북한 핵불사용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91. 6. 11) 한편 우리 측의 비핵화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을 순치시키기는커녕 고무시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막상 노대통령의 ‘핵부재’ 선언이 나오자 결국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는 계기

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마침내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데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문제가 빠진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서울, 91. 10. 22, 11. 28, 12. 19, 12. 24, 12. 28).

한편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에 관해서는 동시가입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단독가입 강행은 북한 유엔가입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마침내 현실을 인정하고 동시가입을 수락한 것은 우리의 <적극외교>의 효과라고 평가하였다 (서울, 91. 4. 9, 5. 30)

대소관계에 있어서는 평소 자유주의적 주장을 해오던 측에서 오히려 보수적 시각을 보였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거청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남침 지지 원조>, <대한항공기 사건>과 관련해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소련은 경협에만 관심이 있으며 오히려 미국 영향력하의 동북아 안보협력관계에 쫓겨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다 (조선, 90. 3. 3, 10. 2, 3. 23, 12. 12).

한편 대소 30억불의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크게 부상되었다. 즉 현금차관으로 10억 달러는 너무 많으며, 더구나 상당부분을 국제금융시장에서 빌려와야 한다는 점을 비판하였고, 아울러 <소련의 정정 불안정> 그리고 향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의 <선례>로 작용할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크게 표출되었다 (조선, 91. 1. 24 / 한겨레, 1. 24).

3. 급진 담론

가. 민주화 관련

먼저 3당 합당을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맹렬히 비난하였다. 우선 김영삼 총재의 <표변>을 비난하고 민자당은 내각제가 아니라 결국 이원집정제로 갈 것이라고 주장한 이래 (한겨레 90. 1. 23, 2. 11), <지자체 연기론>등 거대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개혁의 후퇴>라고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겨레, 90. 4. 20, 9. 30). 아울러 우리의 경우는 일본과는 달리 보-혁 대결구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 對 反민주, 민족 對 反민족, 민중 對 反민중>의 대립구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 시국은 6월 항쟁 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야당과 재야가 <민주대연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중노선>, 즉 민중의 힘을 통한 <저항과 압박노선>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겨레, 90. 5. 10, 5. 24, 5. 26, 6. 19). 이러한 입장에서 평민당의 장외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향후 평민당이 <협력해야 할 세력>으로서는 <전국의 각 지역에 조직을 두고 있는 전민련, 전노협, 전교조, 전대협>이며 이들과의 연대 즉 <민족, 민주세력의 대단합과 진보적 양심세력의 규합>을 역설하였다. 또한 각종 투쟁들이 <反민자당 정권 투쟁>의 성격을 띠어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야운동권과 정치권을 아우르는 한시적 연대기구>의 필요성을 높이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겨레, 90. 1. 26, 4. 24, 5. 5, 5. 11).

이러한 연대를 위해서는 김대중 총재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반대하면서, 지금은 그의 조직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한겨레, 90. 1. 29), 야당 통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친김대중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겨레, 90. 7. 20, 7. 24, 7. 31, 9. 16, 10. 9).

재야 특히 학생들의 폭력노선에 대해서는 그 근본 원인이 정권의 비민주성, 그리고 경찰의 폭력적 대응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겨레, 91. 2. 14, 2. 21). 미문화원 화염병 투척사건은 운동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한겨레, 90. 5. 3), 강경대치사건의 근본 원인은 <전두환 살인정권>의 후계로서 노태우 정권의 속성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와의 전쟁>도 이에 일조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백골단>¹⁵⁾의 즉각 해체와 전경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겨레, 91. 2. 14, 2. 21, 5. 4).

잇따른 분신자살사태에 대해서는 분신자의 <중압감>과 <결단>에 대해 연민의 정을 표하면서, <배후>를 캐겠다고 나서는 <공안담당세력>이야말로 바로 투쟁대상이라고 공격하였다 (한겨레, 91. 5. 10). 또한 장례투쟁에 대해서는 <추모마저도 진압의 대상으로 본다>고 정부를 비난하였고, 나아가 총파업 선언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한겨레, 91. 5. 10, 5. 15, 5. 17).

잇따른 전면적 시위는 <혁명이나 무력을 통한 권력교체>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대중의 평화적 시위와 집회를 정권 퇴진운동>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동참을 역설하였다 (한겨레, 91. 5. 11, 5. 23, 5. 30, 6. 4). 또한 명동성당이 그동안 경내에서 투쟁

15) 6공화국 들어와 시위 주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헬멧만을 쓴 사복 경찰을 운영하였는데, 이를 급진세력에서는 자유당 때의 정치깡패에 비유하여 <백골단>이라고 명명하였고 이것이 일반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다.

을 벌여온 <대책회의>에게 철수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교회와 정면 충돌을 피해야면서도, 좌절감에 허탈해하는 다수 국민들로부터 어떤 <절망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한겨레, 91. 6. 9, 6. 18).

그러나 정원식 총리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불행한 사태>로 받아들이면서, 이로써 학생운동권 전체와 재야 민주세력이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한편, 공안통치 세력의 <일대 반격>을 크게 경계하기도 하였다 (한겨레, 91. 6. 5, 6. 6).

치사정국의 마무리 속에 치러진 지자체 광역의회 선거에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공세를 주장하였다. 즉 <수세에 몰린 여권>이 국면전환으로 선거를 추진했다고 판단, 선거를 <교묘하게 피해버린 6공에 대한 중간평가> 즉 <민자당에 대한 심판>으로 몰고 가려고 기도했다 (한겨레 91. 6. 11). 그러나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야당의 수권능력에 대해 회의할 뿐 아니라 운동세력 역시 <정치의 주체인 대중의 실체를 더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성의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겨레, 91. 6. 22).

이후 급진담론은 공권력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 등 수세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민주가 반민주를 이기는 길은 통합을 통한 단결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당통합과 야권공조에 역점을 두었다 (한겨레, 91. 6. 25, 6. 26, 7. 17, 11. 5).

나. 경제 관련

3당 합당 이후 나타난 경제개혁의 조정, 연기 움직임은 결국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절대 국민 다수의 기대를 배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주장하였다 (한겨레, 91. 3. 22). 그런 점에서 정부의 4. 4 경제활성화 조치는 복지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요, 정부가 재벌의 요구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난하였다 (한겨레, 90. 2. 10, 2. 21, 4. 21, 4. 22).

한편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를 6개월 내 처분토록 하는 이른바 <5. 8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토지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실천을 촉구하였다. 평소 보수적, 혹은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던 분파에서조차 5. 8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였고, 이 조치가 초법적이라는 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다 (서울, 90. 4. 11, 6. 12 / 조선, 90. 5. 9, 12. 5, 14, 6. 20, 6. 30, 9. 3, 12. 31 / 한겨레, 6. 30, 8. 18, 10. 17).

그러나 물가폭등, 수출, 국제수지 적자 등 모든 부문에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총체적 난국론>을 수궁하되, 그 원인은 3당 합당과 개혁후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겨레, 91. 5. 1, 5. 7, 5. 5). 따라서 안정을 최우선시 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와 재벌의 자제>가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겨레, 91. 4. 3). 또한 정부의 임금억제 방침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임금총액제는 직접적인 임금통제가 현실적 한계에 봉착하자 나온 <술수>로서, 본격적인 연봉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극력 반대하였다 (한겨레, 91. 7. 26). <해외인력 수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면서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한겨레, 91. 1. 19, 3. 1).

악화되는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총수요 관리> 등 적

극적인 긴축정책을 추구하는 데 대해서는 <경제내각 퇴진> 및 <국회의 팽창예산 견제>로 적극 맞서기도 하였다 (한겨레, 91. 8. 9, 8. 15, 10. 18, 10. 23).

재벌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저축을 끌어다가 재벌 기업에 특혜를 안겨주는 성장일변도 정책의 강화라고 비난하면서 (한겨레, 91. 3. 9),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전문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경제단위의 대형화를 반드시 소유의 집중과 문어발 경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나갔다 (한겨레, 91. 5. 31, 6. 19), 한편 현대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제조차 부담을 느낀 나머지 완전히 재계의 이익에 복종하는 재벌위주의 정치를 구상하고 있다며, 현존 질서의 근간을 동요시키려는 엄청난 기도라고 맹비난하였다 (한겨레, 91. 10. 5).

다. 통일 관련

공산권 몰락과 관해서는 이로서 미국의 패권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연방 해체는 세계적인 불행>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겨레, 91. 8. 27). “소련의 대 격변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의 민족 민주운동과 진보적 지식인들에게도 충격을 주어 운동과 지적 논의의 풍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이 수세적인 자세로 돌아서 남북교류의 빗장을 잠근다면 통일운동이 뒷걸음질”칠 것을 우려하였다 (한겨레, 91. 12. 3, 8. 28, 8. 21).

공산권 몰락에 대해서는 급진담론 측에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론장의 논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도전담론의 시각은 거꾸로 자유주의적 시각의 공격에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조선, 90. 3. 23). 첫째, 소련 - 동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혁은 <자본주의로의 역전>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강화>일 뿐이다. 둘째, 그것이 사회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이보다는 고르바초프 개인이 벌이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대한 배신이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역행 행각이다. 셋째, 고르바초프가 배신한 마르크스 - 레닌주의가 이제는 소련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순결성을 수호 받을 때이다.

한편 고립된 북한이 <한반도의 콘크리트 장벽을 남한이 휴전선에 쳐놓았다>고 선전하면서 관문점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남한의 보안법문제를 거론하고 또한 불가침 조약 체결을 주장하고 나서는데 대해서는, 이를 단순히 <선전용>으로 일축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냉전체제가 무너지려면 동북아에서도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겨레, 90. 7. 8, 9. 21).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한데 대해서는, 북한의 <자존심>을 배려해서 핵사찰 수락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겨레, 91. 3. 9, 9. 15, 9. 29). 한편 우리의 비핵화구상과 핵부재 선언과 같은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찰의 수락 여부를 남북한 동시사찰 실시 이후로 미루는 것은 온당치는 않지만, 핵협상은 <당사자 해결원칙>이라는 점에서 <한국 내 핵무기의 철수>를 확인하는 미국의 공식적 입장 표명이 뒷받침돼야 하며, 남북한 <시범사찰의 동시시행>이 필요하다는 북쪽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한겨레, 91. 11. 9, 9. 12, 20, 12. 29). 또한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데 대해서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한겨레, 91. 12. 14, 12. 18).

한소 수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정권이 내정의 실패를 외교적 전시 효과로 덮어버리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소련의 대한수교에 걸맞게 서방국가들의 북한수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겨레, 90. 2. 25, 6. 2, 6. 6, 10. 2). 특히 대소 30억불 경협에 대해서는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기반의 불안정>과 우리의 경제상황을 들어 <차관을 들여와서까지 원조를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신중한 경협을 주장하였다 (한겨레, 91. 1. 24, 12. 24).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호 선전장이 될 가능성도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겨레, 91. 5. 29, 8. 6).

한편 전대협대표의 평양방문 추진에 대해서는 <근래의 국내외 정세와 대중의 정치·사회적 심리상태나 정서>를 고려할 때 균형감각에서 얼마쯤 벗어났다고 비판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대중의 정치적 활력>을 되찾는 작업에 운동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한겨레, 91. 7. 2).

4. 자유주의 담론

가. 민주화 관련

자유주의 담론은 일찍부터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3당 합당에 대해서는 <민주성>여부와 <도의성>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당 내부의 민주적 운영과 쇄신 의지가 중요하며, <변화 지향적 불만층과 노동층의 권익 옹호>, <반대그룹의 과격화 방지 방안>, <일부 관료세력의 권위주의적 행태 재연 방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 90. 1. 23). 그러나 평민당의 장외투쟁에는 반대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설만한 <개혁적 자유주의 노선>, 의회주의 노선에 입각한 <통합야당>의 건설을 촉구였다 (조선, 90. 3. 30, 4. 12, 6. 2).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김대중 총재는 <대동을 위해 소이를 뛰어넘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의 용퇴를 촉구하였다 (조선, 90. 2. 1).

이러한 가운데 3당 합당 이후에는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성장정책 재추진, <토지공개념>유보,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개폐>에 대한 미온적 자세 그리고 <금융실명제> 후퇴 움직임과 함께 특히 거대 여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야말로 <반개혁적 행태>라고 집중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조선, 90. 1. 29, 2. 9, 2. 18, 3. 14). 또한 <지자체 연기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지만,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조선, 90. 2. 23, 3. 16)

재야단체의 도심 극렬 시위, 현대중공업 파업사태, 5월 총파업 노선 등 재야의 극단적인 노선과 함께, 이들의 근현대사 왜곡 등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비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전경 사복조의 운영으로

<백골단>이라고 비난받을 빌미를 제공한 공권력의 미숙성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조선, 90. 3. 22, 4. 15, 5. 11, 5. 1, 4. 13, 8. 15). 이러한 시각에서 강경대 치사사건에 대해서는 과격한 시위문화와 경찰의 과잉진압을 함께 지적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강성 조치를 추구하는 통치권 내 <관치>중심의 인물을 교체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조선, 91. 2. 12, 4. 28, 4. 30).

그러나 이제는 <권력, 시민, 운동권>의 세 가지 행위 주체가 확인되었으며, “시민 층이야말로 이제는 권력의 조작에도, 운동권 끈들의 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을 굳히기 시작했다”고 평가하였다 (조선, 91. 5. 11, 5. 24, 6. 4). 이러한 입장에서 정원식 총리 피습사건에 관해서는 <일부 대학생들의 패륜적 행동>이라고 규탄하면서, 윤리적 투쟁이라는 가면까지 벗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민중혁명 세력, 주사파 집단>이라는 의심이 간다면, 이제는 <중심권이 일어설 때>라고 강조하였다 (조선, 91. 6. 5, 6. 9). 또한 유서대필의혹 사건등과 관련해서는 관련자의 수사 불응은 국가행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또한 명동성당 농성자들은 <긴급 피난자>가 아니라 <점거자>이며, 합법적인 공권력 집행을 거부하는 <위법자>라고 규정하면서, 결국 운동세력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조선, 91. 6. 15, 6. 22).

나. 경제관련

지금은 그동안의 성장노선의 후유증을 치료할 때이지 성장을 내세운 복고로 회귀를 할 때가 아니며, 따라서 지금의 경제난은 사회적 혼란과 정책방향의 혼미가 중첩되어 나타난 것인 만큼 (조선, 90. 2.

8, 2. 15, 3. 28, 4. 11, 4. 23), 경제개혁에 대한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선, 90. 4. 6).

그러다가 물가폭등, 수출, 국제수지의 적자 등 모든 부문에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총체적 난국론>을 수궁하게 되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무규범(아노미) 사태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하면서, 정쟁중지,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 합리적 개혁정책과 효율적 생산구조 창출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조선, 90. 5. 3).

특히 재벌들이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비판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도 명확한 목표 설정에 합일점을 못찾고 있다고 보면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조선, 90. 7. 8). 따라서 재벌에 대한 규제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였고, 재벌에 대한 여신완화는 재벌의 전문화계획을 전제로 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조선, 91. 3. 9).

그런 점에서 정부의 5. 8 조치가 여당의 정치적 기반이자 한국경제의 선도부분인 대기업 그룹과 금융 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위헌성 등 <무리>가 예견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투기억제의 시급성을 정부가 심각하게 수용한 것으로 보고 이의 강력한 실천을 주문하였다. 특히 재벌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촉구하고, 비업무용의 판정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집요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연말에는 5. 8 조치의 <기본골격>이 흐트러지지 않은 점을 평가해가면서, 재벌들이 이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높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였다 (조선, 90. 5. 9, 5. 12, 5. 14, 6. 20, 6. 30, 9. 3, 12. 31).

한편 특이한 것은 평소 급진담론을 펼치던 측에서조차 토지세의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즉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한, 주택은 본래 재산증식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기에 그에 대한 중과세 조치는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겨레, 90. 6. 30, 8. 18, 10. 17).

총액임금제와 같은 임금체계의 단순화에 대해서는 일거에 실현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과, 그것이 노동계의 의심대로 <임금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관점을 드러내었다 (조선, 91. 7. 23). 또한 외국인 노동자 수입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과소비 관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선, 90. 7. 8).

이와 함께 과열경기 진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주택 2백만호 등 정부가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하였다 (조선, 91. 5. 4). 또한 국제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총수요 관리>등 긴축정책을 촉구하면서도, <단기처방은 금물>이라고 반대하였고, 비생산적 투자와 정부 - 민간소비를 대폭 줄이고 그 여력을 기술개발과 경쟁력 혁신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정도이자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 91. 8. 11, 9. 7, 12. 6).

다. 통일 관련

먼저 세기적 사건인 공산당의 몰락을 맞아 <동구와 소련에 지금까지 있었던 공산주의는 실패>라는 점을 적극 거론하여 공론장을 주도

하였다 (조선, 90. 3. 25).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평소 자유주의적 시각이 보수적 시각을 보이는 등 개량적 입장은 크게 축소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움직임이 나타나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 구실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선, 91. 4. 8, 6. 3, 9. 14). 이런 관점에서 노대통령의 ‘핵부재’선언은 결국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조선, 91. 11. 9),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문제가 빠진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였다 (조선, 91. 12. 14).

한소관계의 개선에 대해서도 평소 자유주의적 분파에서 오히려 보수적 담론을 전개한 반면, 보수적 입장을 보이던 측에서는 오히려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즉 이것이 북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平壤에 가는 길>임을 부각시켰고, 또한 대소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철저한 상호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90. 10. 2, 12. 15, 12. 18). 아울러 소연방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다른 입장의 담론들과 함께 이구동성으로 대소경협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조선, 91. 8. 22, 8. 28, 8. 27, 12. 2).

5 공론정치와 담론의 구도

1990년 1월 3당 통합이후 정치권에서는 극한적인 대립구도가 성립되었다. 먼저 소수 야당인 평민당은 <인위적 정계개편>의 부당성과 이것이 결국 민주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나갔다. 반면에 적지 않은 논란 속에서도 3당 합당은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본격적인 개혁조치는 가시화되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거대여당 민자당은 정호용 보궐선거 출마 및 사퇴 사건, 김영삼 - 박철언 충돌, <내각제 합의각서>유출 파동 등 극심한 내홍을 거듭하였다. 소수 야당인 평민당은 이러한 거대 여당의 <개혁후퇴>를 비판하면서, 국회 등원 거부 및 장외집회, 김대중 총재의 단식과 같은 극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91년 새해 벽두는 <수서사건>으로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 부패상의 일단이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공론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부패상에 실망하는 냉소적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수습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한편 정부의 확고한 법·질서 수호 의지가 강조되는 가운데, 재야 세력은 폭력 투쟁으로 노선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선도세력인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 과출소 방화, 법정난투극 등 과격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경대 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정국은 집권 측과 재야 세력의 전면적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총리와 공안 관련 부서의 개각 등 수습노력에도 불구하고 속출하는 분신사태 및 시위로 인하여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사건으로 운동세력은 여론의 역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 목소리로 학생들을 비난하는 등 공론장은 급속히 보수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시된 지자체 광역의회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재야

세력의 힘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공론장은 기묘한 <정적>¹⁶⁾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병국, 임현진, 393-398쪽).

여기에는 무엇보다 재야의 무모한 폭력노선, 군중노선에 대해 시민들이 외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급진담론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한 논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변혁세력은 당내에 주어진 <혁명>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거부하는 <모든 일탈적 상황>에 <개량의 낙일>을 찍으면서 내부 분열을 자초하고 사상논쟁의 뒷에 자기 자신이 결박당한 형국”이었다고 슬회한 바 있다 (조희연b, 187쪽).

또한 공산권의 몰락과 북방 - 대북정책 성과의 가시와, 그리고 악화된 경제상황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한편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3당 합당이 기정사실화하여 새로운 지배연합이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자체통합 문제에, 그리고 재야 운동세력은 새로운 조직정비를 위한 내부투쟁에 돌입한 것도 주요 요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이후 정국은 정부 · 여당의 주도권 속에서 운영되면서, 도전세력들의 야당통합과 야권통합이라는 두 갈래의 역량결집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야당은 김대중 지도노선하의 민주당으로 통합되었고, 재야세력은 국민연합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등 기존의 조직을 해체하고 부문운동 단체들과 지역조직의 단일 지도체제인 <민주주의 ·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결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의 정치참여 선언으로 정국은 민자당 - 민주당 - 국민당의 3당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14대 총선과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한편 89년 하반기 시작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시작으로 동구권

16)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각 수석 비서관실별로 “오늘날 어찌서 갑자기 이러한 <태평성대>가 왔는지에 대해서 분석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의 탈공산화 그리고 소연방의 해체 등 세계적인 탈공산주의 변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론장에서는 급진담론이 이에 정면 대응하지 않음으로서 논쟁은 성립되지 못한 가운데 급진담론은 급속히 세를 잃어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방정책은 동구권 국가 및 소련, 그리고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91년 9월 17일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실현시켰다.

이와 함께 공산권의 몰락으로 인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수세적 공세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고위급(총리)회담이 진행된 결과 91년 12월 13일 남북간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데 이어, 동년 12월 31일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고, 92년 북한은 <핵 안전협정>에 서명하였다.

공론장에서는 기존의 보수담론과 급진담론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가운데, 오히려 기존의 자유주의적 입장이 정부에게 신중성을 촉구하는 구도를 보였다.

한편 악화되는 경제난 속에서 그동안 잠복되었던 <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쟁력 회복문제가 공론장의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안정화 시책과 함께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재벌의 문제가 6공화국 후반기 공론장의 최대 쟁점으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그룹의 변칙 주식거래에 대해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현대의 정치참여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 - 재벌 혹은 재벌의 효용성 문제 등으로 담론이 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재벌일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임현백, 356-360쪽) 현대라는 특수 재벌의

정치참여라는 정치쟁점으로 전환하여 경제담론에서는 자리를 감추게 되었다.

총체적으로 보아 3당 합당 이후 정치권은 이념적으로는 <온건보수 + 대부분의 자유주의> 대 <일부 자유주의 + 급진주의> 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정치구도는 공론장의 이념분포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 정치권과 공론장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첫째, 제도권에서는 자유주의 세력의 주류가 여당이 되었지만, 공론장에서 이들은 오히려 보수담론과 거리를 두면서 여당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자유주의 담론과 보수담론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두 번째로 전체 야당 혹은 범야권 내에서 자유주의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 상대적으로 급진담론의 비중이 가화되었다. 그리하여 정국상황은 거대 여당에 대해 소수 평민당과 재야세력이 격렬히 반발하고 도전하는 형국이 되었고, 공론장에서는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화된 지배담론과 도전담론의 대립이 예각화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3당합당 이후의 공론장은 성장담론과 분배담론이 부닥치는 <성장 - 분배담론>의 대립구도가 중심축을 이루었다. 이때 민주화 담론은 분배담론에 흡수되어 나타났다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통일담론>이 보조 축을 형성하였다.

고리하여 지배담론의 방어적 <성장담론>과 도전담론의 투쟁적 <분배담론>이 맞부닥치는 <체제충돌형>(Ⅲ) 담론구도가 기본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3당 이후 도전담론은 민주화 담론의 투쟁적 성격을 강화시킨데 반해, 지배담론은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선제적>인

통일담론을 강화하면서 <체제과국형>(IV) 담론구도가 보조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겠다. 이는 하버마스 유형보다는 혁명을 추구하는 그람시형의 헤게모니 투쟁의 공론장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론의 이념적 대립구도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민주화 담론의 경우 전기의 3자 대립구도는 여전히 지속되지만, 운동세력의 폭력노선이 점증하는 것에 반비례하여 사회이슈는 물론, 김대중 총재에 대한 입장을 두고서 보수 대 급진의 양자 대결구도의 무게가 점차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성장 - 분배 담론의 경우에는 더욱 더 지배담론과 도전담론의 양자 대립구도가 부활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재벌에 대한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공론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반재벌 정책이 일종의 컨센서스를 형성하였다. 셋째, 통일담론에 있어서는 각론에서 보수적, 자유주의적, 급진적 담론의 3자 대립구도가 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북방정책에서 자유주의 분파가 정부의 급속한 대소 수교에 드라이브 제공을 거는 등 보수적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지대화를 지지하는 등 다소 급진적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인 점이다.

3당 합당 후 각 담론을 대표하는 매체들의 기본적인 이념적 정체성은 보다 강화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적지 않는 수정과 이에 따른 혼란은 겪었다고 보인다.

먼저 보수적 분파는 성장담론을 적극 부활시키려 하는 등 전체적으로 더욱 보수다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남북교류 이벤트에 대한 긍정적 태도, 대소수교에 대한 일방적 찬양 태도 등 통일 분야에서는 다소 급진적 태도를 많이 보였는바, 이는 이념적 요인보다는 매체의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 역시 정계개편론을 주도하였지만, 3당이 통합되자 지배연합이 보다 보수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비판하는 등 좀 더 자유주의화 하였다. 또한 연봉제 문제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와 급진의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통일 분야에서는 사안별로 다소 혼란스러운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또한 대소 수교에서는 남침과 KAL기 사건에 대한 사과 등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낸 반면, 북핵사태를 맞아서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요구 등 다소 급진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특히 도전담론은 심하게 교조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3당 합당에 대한 반대이기는 했지만 과도한 폭력노선과 군중노선을 드러냈으며, 공산권 붕괴에도 애써 외면하거나 이를 유감스럽게 보는 시각을 드러냈으며, 심지어 북한의 콘크리트 장벽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 등 친북논리를 구사하였다.

이 시기에도 담론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강한 영향력 하에서 움직였다. 통일담론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야당통합 문제에서는 친김대중이나 반 김대중이나가 지배담론과 도전담론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도전담론 내에서도 분과를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담론의 비현실적, 교조적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당합당 전에는 보수적 분과에서도 성장론을 극구 외면하다가, <3당 합당>이후에는 <경제후퇴>가 사실로 드러나자 분배담론으로 일순간에 입장을 변화시킨 것은 우리 담론이 갖고 있는 비현실적 사고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도전담론은 이념과잉의 폭력, 군중노선, 그리고 맹목적인 친북노선으로 인하여 스스로 합리성을 상실하고 마침내 민주화 담론의 실종을 초래, 스스로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파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론장에서 담론들이 대부분 성장담론으로 회귀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모든 담론들이 강력한 반재벌의 입장만은 견지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6. 이후의 문제들

이렇게 공론장은 정적 속으로 들어갔고, 92년 들어서면서 국회의원 선거, 민자당 대선후보 경선 그리고 연말 대통령선거 등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국민당의 등장으로 3당 체제가 형성되었다. 선거국면을 맞아 공론장은 다시 지역담론에 휩싸이는 등 철저히 선거전략에 종속적인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담론의 구도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심화였다. 악법 개폐 등 6공화국에서 못 이룬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심화로서 생활세계의 민주화였다. 성불평등, 장애인 및 동성애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인권문제,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 미시담론 혹은 포스트 모던 담론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는 새로

운 모순에 대한 저항담론이다. 즉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자유주의의 효과를 초래하고 이는 글로벌 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UR협상의 쌀개방문제와 관련하여 세계화 담론이 부상하는 한편, 그 안티테제로서의 민족주의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넷째는 6공화국말에 봉합된 북한 핵 문제였다. 이후 이 문제는 오늘까지 주요한 담론의 이슈가 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담론상의 변화 조짐은 대부분은 3당 합당으로 반독재 야당 분파가 헤게모니 분파가 됨으로써 지배블럭의 성격이 변화한 데 따른 변화이며,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문민개혁 담론과 세계화담론으로 변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 담론은 6공화국 당시에는 국제화 개념이라는 성장주의 담론의 변종으로 나타나지만, 내용상으로는 <보호주의적 발전주의>에서 개방화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방주의적 개발주의>로 바뀌고 있었다고 하겠다 (조희연, 2003, 88-99쪽).

VI. 결론

이러한 골격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 드러나는 6공화국 공론장의 성격과 담론투쟁의 특징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6공화국의 공론장은 3당 합당을 경계로 양분된다. 3당 합당 이전에는 <민주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 방어적 지배담론과 경쟁적 도전담론이 맞붙는 <체제안정형>(I)이라는 하머마스형을 기본구도로 하였던 반면, 3당 합당 이후에는 지배담론의 <방어적>인 성장담론과 도전담론의 <투쟁적>인 분배담론의 정면에서 부닥치는 <체제충돌형>(III)의 그람식 유형을 기본구도로 하였다.

둘째, 공론장은 기본적으로는 계급적 이해를 반영하지만, 그로부터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지배계급 내의 <헤게모니 집단>의 정치사회적 이념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지배담론과 도전담론은 계급적 이해보다는 보수주의적 분파, 자유주의 분파, 도전 그룹 등 이념성향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셋째, 공론장은 항상 자체의 합리성에 기반하여 헤게모니가 형성되지 않으며, 외부 요인에 의해 부상하거나 침잠하는 등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외부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제도 정치, 즉 정당과 통치권의 영향력이다. 여기서는 주로 정치권과 정부의 문제 제기 → 공론장의 담론투쟁 → 정치권의 타협, 수용 → 정부의 결정이라는 진행순서를 기본구도로 하지만, 정부 혹은 정치권의 결정이 선행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진행수순을 밟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정치권과 통치권의 책임회피는 공론장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넷째, 민중적 압력도 공론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경우에 따라서 담론들은 민중영합적으로 쏠리거나 심지어 교

조화 하는가 하면, 대세를 좇아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위장, 은폐 하는 경향도 있다.

다섯째, <성장-분배담론>의 분열, 특히 경제적 코스트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개혁의 명분 하에 전개되는 분배담론은, 개혁의 물질적 토대인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잠식하여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개혁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여섯째, 6공화국 전체를 통해 일관성 있게 합의를 이루는 공통된 담론은 <反재벌론>이다.

6공화국의 공론장은 민주화 이행기에 걸맞게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지 않는 제약을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담론들의 위장성이다. 특히 급진담론은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혁명논리이면서도 이를 부정하기 일쑤였다. 레드 콤플렉스의 한계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위장으로 인해 진지한 담론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당시 급진담론은 무모한 대결적 혁명논리, 정부전복 논리로 일관함으로써 공론장이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입지까지도 크게 위축시켰다. 아울러서 모든 담론들이 민주화의 당위성에 눌러서 경제현실에 관한 비현실적 사고로 시종한 결과, 실제 의미 있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논문>

- 김도중. “박정희 패러다임의 등장과 지속에 관한 담론적 접근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중구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3집 1호, 한국정치 외교사학회, 2001.
- 김병국, 임현진. “제8장 노동정책:국가의 실패, 노동의 좌절 및 자본의 농성”, 안청시, 진덕규 편 『전환기의 한국민주주의 1987-1992』, 법문사, 1994
- 김용직a. “유교적 공론성과 시민사회적 공론성:현대 한국의 정치문화의 복합성”, Dialogue Among Civilization-Pluralism and Publici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미발표 논문, 북경, 2001년 9.28
- 김용직b. “1920년대 일제 ‘문화통치기’: 민족언론의 반패권 당론투쟁에 관한 소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구조』. 백산서당, 2004.
- 김용철.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 시민사회의 역동”. 韓興壽 편. 『한국정치 동태론』. 도서출판 오름, 1996.
- 김일영.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3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1.
- 김호기. 김영범,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헤게모니 프로젝트”, 임현진.송 호근 공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한국의

-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사회비평사, 1995
- 백종국. “한국 자본주의 체제변동의 요인과 전망”, 임현진·송호근 공
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
주의』, 사회비평사, 1995
-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갈등구조:근대 신문의 생성과정을 중심으
로”, 『한국언론정보학회보』 통권 27,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년 겨울
- 손호철. “전환의 한국정치: 61년 체제의 해체와 변형”. 최장집, 소네
야 스노리 공편. 『변동기의 한일정치 비교』. 아연출판부,
2003.
- 이강로. “대통령제와 14대 대통령선거의 전망: 대통령의 지도력과 정
책결정 주요인의 비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과 비서
실”, 『선거와 한국정치』. 한국정치학회, 1992.
- 이상익·강정인, “동서양 사상에 있어서 정치적 정당성의 비교: 유가의
공론론과 루소의 일반의지론을 중심으로”, 『정치사상 연
구』 제10 권 1호, 2004년 봄
- 이연호.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국가등장의 한계:
동아 시아 개발도상국의 한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3
집 4호. 한국정치학회, 1999.
- 조희연b, “사회구성체 논쟁의 반성과 90년대 논쟁의 출발점”,
『길』, 1992년 12월호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 『한국
정치 학회보』, 1998.
- 정태석, 김호기,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전망”, 유팔무,
김 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단행본>

- 강문구. 『한국민주화의 비판적 탐색』. 당대, 2003.
- 고승우. 『한겨레 창간과 언론민주화』. 나남출판, 2004.
-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1』, 1992
- 김대영. 『공론화와 정치평론: 닫힌 사회에서 광장으로』. 책세상, 2005.
- 김석준.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 풀빛, 1991.
- 김영명. 『한국 현대 정치사: 정치 변동의 역학』. 을유문화사, 1992.
- 김영명.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재검토, 한국과 일본의 경우』. 소화, 1996.
- 김학준, 엄홍철 역음. 『선진 한국의 모색: 제6공화국 정책평가』. 동화출판사, 1993.
- 대통령공보비서실 편. 『민주주의의 시대, 통일을 여는 연대: 노태우 대통령 1년의 주요 연설』. 동화출판공사, 1989.
- 박상섭. 『자본주의 국가론: 현대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의 전개』. 한울, 1985.
- 손호철.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비신서123. 창작과 비평사, 1993.
- 손호철.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1995.
- 신도철, 김광웅, 최명, 박찬욱 공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의식과 이념 적 성향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백산서당, 2004.
- 安淸市, 陣德奎 편저. 『전환기의 한국민주주의 1987 - 1992』. 법문사, 1994.

- 어수영.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박영사, 1999.
-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와 새로운 진보』. 논형, 2004.
- 윤상철.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윤영관.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 좌(左) 우(右) 그리고 집중구조를 넘어서』. 신호서적, 1999.
- 이효선. 『현대한국의 시민운동』. 집문당, 1997.
- 임현진, 송호근 공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사회비평사, 1995.
-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 읽는책, 2003.
-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사서설』. 지식산업사, 2000.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2.
- 최장집, 임현진 공편. 『시민사회의 도전: 한국 민주화와 국가, 자본, 노동』. 한국의 정치경제1. 나남, 1993.
- 최장집, 임현진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한국 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나남출판, 1997.
- 한배호. 『한국정치변동론』. 법문사, 1994.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58.(이진우, 태종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 Femia, Joseph V. *Gramsci's Political Thought: Hegemony, Consciousness, and the Revolutionary Process*. Oxford:

Clarendon Press, 1987.

Habermas Jurgen a. *Between Facts and Norm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6(한상진. 박영도 공역,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출판, 2000).

----- b.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1(한승완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001).

Held, David (ed.).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Essay on State, Power and Democracy*. 1991(안인순 역. 『정치이론과 현대 국가: 국가, 권력,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학문과 사상사, 1994).

Sasson, Anne Showstack (ed.). *Approaches to Gramsci*. London: Writers and Readers, 1982(최우길 역. 『그람시와 혁명전략』. 도서출판 녹두, 1984).

Whitehead, Laurence. *Democratization: Theory and Exper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ABSTRACT

A Study of Democratization in Korean Politics

Suh, Myung Koo
Dep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mocracy is the rule by consent. The Public sphere, as an area of civil society where the competitive public opinions coexist, is a process producing such consent and a mechanism justifying the rule by consent as well.

During the 6th Republic the politics in Korea is supposed to have met the basic conditions or format of the public sphere and opened the era of government by the public opinion. There, however, remains the possible discussion of its political instability and imperfection, though. Howsoever, the 6th Republic is the period of transition to democratization. On this assumption, the characters and qualities of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can be clarified by the analysis of public sphere of the 6th Republic.

The Public sphere is composed of the confrontation of dominant discourse with challenging discourse. During the 6th Republic various discourses like democratization-discourse, growth-distribution- discourse, and unification-discourse etc. had been alternately or competitively taken sometime by the ruling group and sometime by the challenging group. The 'discourse struggle' of the 6th Republic showed a great change of its basic structure and aspect on the pivot of the merge of the three parties. Before the merge, the 'regime-stabilizing typed' discourse had been formed and then transformed to the 'regime-conflicting typed' discourse after. In the late period of the 6th Republic, this kind of aspect disappeared and finally the public sphere turned into the sphere of 'Sile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struggle of the 6th Republic can be summarized like this: First, the discourse struggle show the characteristic of the 'regime-stabilizing type' before the merge of the three parties and the one of 'regime-conflicting type' after. Second the character of the discourse is influenced rather by the various politico-social factors and ideology than the social class. Third, the public sphere is not always under control b the rationality of its own but greatly influenced by the outer factors, that is, the

government of the political fields. Fourth, the people puts strong pressure upon the formation of the discourse from without. Fifth, the reformation-discourse ignoring the realistic situation makes the inroads into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growth and moreover endangers the reformation itself. Sixth, one of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of the 6th Republic gains the color of the anti-Jaebols.

These characteristics typifying the public sphere of the 6th Republic are made to be the same ones of the public sphere of Korea after democratization. They are appreciated to act as the limitation and the conditional factors of democratization of Korea.